

2026 GWANGJU
DEMOCRACY FORUM 2026
광주민주포럼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2026. 5. 14. THU - 5. 16. SAT

2026 GWANGJU
DEMOCRACY FORUM 2026

광주민주포럼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프로그램]	05
[기획문]	06
[개회사]	12
윤 목 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축사]	13
고 광 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기조세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방안	15
[사회] 박 태 군 서울대학교 제도혁신위원장	
[기조발표1] 힘과 AI를 앞세운 트럼프 2.0: 미국 우선주의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가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서재 정 듀크대학 방문학자	
[기조발표2] 압박받는 민주주의: 지정학적 공포를 민주적 회복력으로 전환하기 선 시우화 대만 국립청화대 사회학연구소 박사	
[주제세션] 다가오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	29
[사회] 오 은 영 전남대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1] 12.3 내란을 통해 본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극복방안: 시민을 중심으로 정 연 순 법무법인 경 변호사	
[발표2] 디지털 독재?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론·인터넷 탄압 대응 프리아 시그델 Hatti Hatti Nepal 공동창립자, 사회적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발표3] 빛의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 태 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포커스세션]	49
[사회] 이유 경 국제분쟁전문기자	
[발표] 베네수엘라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과제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베네수엘라 언론인, 디지털 권리 활동가	
[발표] 이란: 전쟁의 지정학과 민주적 변화의 전망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문명학부 교수	
[아시아 민주주의세션]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의 위기	61
[사회] 김 희 숙 전북대 동남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1]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 유 예 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발표2] 국경 분쟁의 정치적 기획과 동원: 캄보디아 사례 박 진 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공동연구원	
[발표3] 자유, 범죄, 폭력, 저항: 미얀마 국경지대의 양면성 박 재 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국제학부 조교수	

[기획세션] 판을 뒤집는 우리들의 방식	83
[사회] 카렐 갈랑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여는발표1] 불안을 먹고 자라는 극단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권력·부의 편향성,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분열에 관하여 - 김 형 남 정치싱크탱크 밸리드 공동대표	
[여는발표2] 아시아의 선거: 도전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무결성 강화 브리자 로살레스 ANFREL 사무총장	
[발표1] 청년 시위에서 대중 시위로: 세대적 각성 살레 우딘 시파트 방글라데시 국민시민당 공동사무부총장	
[발표2]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 조 용 기 인도네시아대학교 철학과 재학생, 거리 응급활동가	
[발표3] 멕시코 청년의 현실과 연대의 주거 운동: 함께 삶을 짓기로 결정한 청년들 연 정 화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생	
[발표4] 저항과 생존 사이: 쿠데타 이후 미얀마 청년들의 삶과 고민 김 소 연 미얀마 유학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발표5] 세계적 흐름 속 태국 시민사회의 방향 시라폼 품퐁퐁 전 정치수, Ratsadon 2020 Movement 소속	
[이행기정의세션]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135
[사회] 박 래 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여는발언]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조 인 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1] 세월호참사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 - 12년이 묻는 질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 선 우 4.16연대 사무처장	
[발언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 이미 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3]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년 4개월 뒤,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의 실태 김 유 진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언론세션] 분쟁지역 영상저널리스트의 기록과 상처	163
[사회] 채 영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발제1] 외상에서 상으로: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조 재 희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발제2] 분쟁 지역 취재 저널리즘 필립 콕스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토론1] 외상에서 상으로: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임 인 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2] 카메라 뒤의 상처 신 봉 승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 영상기자	

2026 GWANGJU DEMOCRACY FORUM 2026

광주민주포럼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프로그램

5. 14. (목)

DAY 1

9:30 - 10:00	등록
10:00 - 12:00	[기조]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방안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30	[주제] 다가오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
15:30 - 16:30	[포커스] 베네수엘라
16:30 - 18:00	[아시아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 위기
18:00 -	[네트워크 파티] 저녁식사

5. 15. (금)

DAY 2

9:00 - 10:00	상영회 및 등록
10:00 - 11:50	[기획] 판을 뒤집는 우리들의 방식
11:5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기획] 판을 뒤집는 우리들의 방식
14:00 - 15:00	[포커스] 이란
15:00 - 18:00	[이행기정의]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18:00 -	저녁식사

5. 16. (토)

DAY 3

9:00 - 10:00	등록
10:00 - 12:00	[언론] 분쟁지역 영상저널리스트의 기록과 상처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40	광주인권상 수상자 만남
13:40 - 15:00	[종합] 및 폐막식
15:00 - 21:00	[5·18 사적지 투어] 저녁식사 [5·18 민주화운동 제 46주년 전야제]

2026 광주민주포럼 기획문

(Gwangju Democracy Forum, GDF)

○ 주제(안)

–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 기 간: 2026년 5월 14일(목) ~ 16일(토)

■ 장 소: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방 식: 대면(온라인 송출)

■ 언 어: 한·영 동시통역

■ 주 최: 5·18기념재단

■ 공동주관: 5·18기념재단, 국제민주연대(KHIS),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전북대학교동남아연구소(JISEAS),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한국영상기자협회(KVJA),
레메디아: 미디어 정신건강 치유 연구단

I. 광주민주포럼은

광주민주포럼(GDF)은 5·18기념재단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5월에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2026년에는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다른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도미노처럼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배경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세계는 전쟁 중이다. 군대와 포연은 없지만, 자원과 영토확보를 위해 외교력과 무역 관세를 동원한 전쟁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실패한 정부들은 항의하는 자국민들의 불만에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대응하며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지구 곳곳의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 항거하며 통제 권력에 맞서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를 지나 비극적인 힘의 대결을 막고 인류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자 국제기구를 탄생시키고 협약과 국제법을 제정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탐욕으로 인한 자원 전쟁과 영토 분쟁, 무력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일상을 위협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합의들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며, 개별국가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중소국가의 안보·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캐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이러한 상황을 꼬집으며 아래와 같이 중견국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없으면, 우리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국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 경계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연대가 절실하다. 연대는 국가·정부간의 연대뿐만 아닌 시민사회 간의 연대도 필요하다. 시민사회 또한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맞서 범국가적 연대를 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추상적인 연대와 호소가 아닌 시민사회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2026 광주민주포럼에서는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라는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흔들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연대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제 거리의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Gen-Z세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시위 문화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III. 광주민주포럼(GDF) 구성

○ [기조 세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방안

민주주의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극우화,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한 경제적 압박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시도 등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도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은 ‘No King Protest’, ‘ICE OUT’ 시위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중화사상’과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홍콩·대만·마카오를 포섭하려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고립과 해상 봉쇄 등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며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한한령’, ‘한일령’과 같은 조치를 통해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6 광주민주포럼 기획문

(Gwangju Democracy Forum, GDF)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한쪽과도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외교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미·중 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6 광주민주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세션에서는 이러한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현상을 살펴보고, 미·중 패권 경쟁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회·경제 대응과 시민사회 연대 등 다양한 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주제 세션] 다가오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

앞선 기조 세션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면, 본 주제 세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한국의 12·3 내란 사태는 재판을 통해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극우 세력들은 ‘윤 Again’을 외치며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극우화 양상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준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극우화 현상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살펴보고, 지난 겨울 차디찬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정보교류와 교육연수를 통해 활동 기반 마련에 개입하고, 민주주의 기금을 조성해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촌 이웃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에 개입하는 등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로 최근 그 효용성과 부작용이 드러나는 디지털 연대를 다루고자 한다. 소셜미디어는 정부의 무력 진압과 폭력을 외부에 알리고 시위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이에 대응해 일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며 통제를 시도하지만, 시민들은 우회적 방식으로 다시 디지털 공간을 점유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위 결집과 이를 탄압하는 국가 권력, 그리고 다시 이를 되찾아가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과정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이 세션이 시민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적 공조 속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아시아 민주주의 세션]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의 위기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이 세션에서는 최근 국가 간 무력 충돌과 내전, 초국적 범죄 등이 중첩되어 ‘문제의 공간’으로 부상한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국경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명한다.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은 민주주의의 경계선과도 같다. 선거와 의회, 법치가 작동하는 중심부와 달리 국경 지역에서는 군과 안보기구, 무장세력, 비공식 권력이 일상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한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유예되거나 배제되며, 이러한 ‘예외 상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통치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이 세션은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재정의함으로써 ‘안정’을 명분으로 한 군사화, 민족주의 동원, 시민사회 공간의 축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기획 세션] 판을 뒤집는 우리들의 방식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편향성, 경제·사회 불평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국에는 소외계층은 삶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네팔, 인도네시아 등에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 운동이 지속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각국 시민운동에서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Gen-Z세대들을 초청해 반 부패 반 불평등운동(ANTI CORRUPTION)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열에 대한 운동들이 상대적으로 약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 Gen-Z세대들의 운동과 활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역들의 이야기를 펼쳐보려 한다.

○ [이행기정의 세션]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현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역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아닌 무관심과 부작위로 작동되어야 할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대규모 참사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에 그 책임과 해결을 묻고 있다. 연이은 대형 사건 발생 후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많은 경우 여전히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광주민주포럼의 상설 주제인 이행기정의 세션에서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트라우마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세션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 수립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광주민주포럼 기획문

(Gwangju Democracy Forum, GDF)

○ [언론 세션] 분쟁지역 영상저널리스트의 기록과 상처

세계 곳곳에서 잔혹한 무력 충돌과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분쟁지역의 기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을 기록한다. 카메라를 통해 송출되는 영상은 분쟁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극심한 두려움과 분쟁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축적된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올해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기획하고 준비 한 언론 세션은 카메라 뒤의 저널리스트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경험과 고난 그리고 사명과 내면의 이야기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 연계 행사

2026 광주민주포럼에서는 참여한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5월 14일에 네트워크 파티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자국 상황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을 선보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5월 16일 2026 광주민주포럼 폐막 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을 포함한 5·18사적지 투어와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민주의 밤”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5·18은 46주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들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포럼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포럼 외에도 광주의 오월을 알차게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목현

존경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 및 연구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 광주민주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New Era(뉴 에라), 민주주의의 리부트”라는 주제 아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는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양극화와 가짜 정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의 집중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 희생과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광주를 통해 배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시민들은 서로를 지켰고, 절망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단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 기록된 위대한 시민연대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광주민주포럼은 바로 그 정신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 저항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거리와 광장에서 새로운 참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세대와 Gen-Z(젠지)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일부 정치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참여와 연대의 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우리는 국제연대, 기억과 기록, 혐오와 극단주의, 디지털 시대의 시민참여,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광주에서 만나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광주는 그 길의 맨 앞에서 늘 시대의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번 2026 광주민주포럼이 세계 시민사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가 다시 한 번 세계 민주주의 연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포럼의 뜻깊은 논의와 연대의 시간이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고광완

존경하는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5·18민주화 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26 광주민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의 파고 속에서, 시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경 앞에서도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의 현재적 계승입니다.

올해 광주민주포럼의 주제인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를 직시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세우자는 절박한 다짐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이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의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국제적 연대의 장이 된다는 점이 더욱 뜻깊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18의 도시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이 포럼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등 공동주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를 찾아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께 따뜻한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5월 18일 당일에는 버스와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등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지역 제과점과 사회적기업들이 함께하는 오월광주 나눔세일도 열려 광주의 정과 나눔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민주주의 대축제에도 꼭 함께하시어,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대동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간의 포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연대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기조세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방안

[사회]

박 태 군 | 서울대학교 제도혁신위원장

[기조발표1]

힘과 AI를 앞세운 트럼프 2.0: 미국 우선주의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가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서 재 정 | 듀크대학 방문학자

[기조발표2]

압박받는 민주주의: 지정학적 공포를 민주적 회복력으로 전환하기
선 시우화 | 대만 국립청화대 사회학연구소 박사

기조발표1

힘과 AI를 앞세운 트럼프 2.0
: 미국 우선주의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가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서재정 | 듀크대학 방문학자

미국 코넬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SAIS) 및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했고, 현재 듀크대학 방문학자 및 메이지가쿠인대학 연구원으로 있다. 저서로 『괴물의 시대: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요동하는 한반도』,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힘과 AI를 앞세운 트럼프 2.0 : 미국 우선주의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가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서재정 | 듀크대학 방문학자

들어가며,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트럼프 행정부 2.0’을 출범시킨 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며 미 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한편 주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일반 시민의 자유와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밖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무시하거나 공공연히 위반하며 거의 모든 국가에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타국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 안팎에서 국가의 권력 행사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분석들도 난무하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 특별히 말이 많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성격이 독특하고 강렬하기 때문이다. 그의 ‘거래주의’적 성향은 미국 대통령직에 집중된 힘 덕분에 전세계를 뒤흔들 파급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책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의 모델을 인용해보면 국가는 거대한 관료기구이기도 하고, 다양한 개인과 이해집단이 정책 결정을 두고 경쟁하는 장소이기도 하다.¹⁾

그리고 이 국가는 세계 속의 여러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트럼프 2.0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 2.0의 정책과 그 영향을 전망하려면 트럼프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인물과 조직, 미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미국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주의 제도의 와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 우선주의에 내재한 통제와 전쟁

트럼프 정부 2.0이 내세우는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적어도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더 길게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진 구호였다.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2.0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백인 중산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직후부터 백인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불법이민자 단속에 적성외국인법(1798년 제정)을 적용한 것도 예외적이었지만 불법 이민 단속을 구실로 연방군을 동원한 것은 주정부와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행보였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뒤엎고 트랜스젠더에 적대적 정책을 추구한 것은 다분히 백인 우선주의에 젖어있는

지지자들을 고려한 것이지만, 헌법에 명문화된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무력화하는 반공화주의적 행보였다. 또한 대학과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며 민권을 침해한 것도 대통령에 대한 감시·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즉, 트럼프 정부 2.0에서는 기존의 삼권분립과 법치를 위협하는 대통령 권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미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가 트럼프 정부 2.0에서 작동되는 방식에는 이전의 권위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 첨단기술을 동원한 테크노 권위주의적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불법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공항과 거리, 법원과 직장 주변까지 일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그 감시와 통제를 효율화·자동화·신속화하고 있다. 도처에 있는 CCTV카메라 및 다양한 센서로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개인 신상을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해서, 감시와 체포의 결정을 인간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2.0은 이러한 기술과 장비를 장악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배제하려는 테크노 권위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대외적으로 카터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외교도, 조지 W. 부시와 같은 공화당 대통령의 ‘네오콘’(neocon)적 외교도 개입주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지원을 통해 동맹국은 부흥했지만, 이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하며 미국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미국의 쇠락, 중국의 부상, 동맹국의 흑자 누적이라는 이들의 비판은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필요하면 적국이든 우방이든 상관없이 힘을 사용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MAGA와 미국 우선의 이러한 결합은 ‘노골적 현실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무부의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전략계획은 서반구 주도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주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문명적 동맹’ 재건 △경제 및 기술의 우위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가지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시, 미국우선주의자들이 미국의 전세계 개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전세계에 걸쳐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힘이 있는 한 세계에서 고분고분 물러나고 싶지 않다. 단지 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행사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제국이 힘이 있을 당시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비용이 이득보다 높으니 노골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이익을 지키려 한다.

1)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ongman 1999.

2) Steven Levitsky, Lucan A. Way, and Daniel Ziblatt, “The Price of American Authoritarianism: What Can Reverse Democratic Declin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26, pp. 30–43.

단, 트럼프 정부 2.0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2025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국무부 전략계획>, <2026 국방전략>에 담긴 ‘경제·기술의 압도적 우위’라는 목적의 지향점은 단순히 미국의 과학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거나, 미국의 생산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경제체제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장악한 집단이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국가안보 및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발전된 경제” △“가장 선진적 과학기술과 혁신”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것이라며 테크노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테크노 자유지상주의 뒤의 아리스토폴리즘

뉴욕타임즈 지는 2025년 말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를 평가하며 그는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직’을 역사상 가장 제왕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³⁾ 동시에 트럼프는 제왕적 대통령직 위에서 ‘제국주의적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⁴⁾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제국주의적 제왕 트럼프 2.0은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테크노 권위주의·테크노 패권을 구축, 미국을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려 시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는 21세기 들어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시도해왔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을 선언,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유럽 및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다. 이를 이어받은 트럼프 1.0은 중국을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관세 등을 동원해 더 공세적 정책을 시작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같은 정세 판단을 공유하면서도 전술적으로는 동맹 및 미나다자기구들을 동원해 중국의 손발을 촘촘히 묶으려 했다. 이러한 시도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2.0은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치경제를 재편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도하는 세력은 MAGA 지지자 중에서도 피터 틸 및 일론 머스크와 마크 앤드리슨 같은 인물들이고 팔란티어나 안두릴, 스페이스X와 같은 신흥 하이테크 기업들이다. 이들이 테크노 권위주의나 테크노 패권의 실현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트럼프 2.0에서 실현하려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이념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테크가 생산성을 도약적으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결국 개인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극대화해 줄 것이라는 비전이다.⁵⁾

인공지능과 가상화폐와 같은 첨단기술이 개인을 국가정부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고양으로 인류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삼지만, 기업과 개인은 정부로부터도 자유로워야

3) Peter Baker, “Trump Takes America’s ‘Imperial Presidency’ to a New Level,”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25.
4) “America has an imperial presidency: And in Donald Trump, an imperialist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century,” The Economist, January 23, 2025.
5) 줄고, 「트럼프 정부 2.0, 위기인가 기회인가」,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 참조.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과학기술 냉전’의 시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보고 있기도 하다.⁶⁾ 반면, 오픈시나 엔트로픽 등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은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현 경제체제를 분석하는 틀로 제시한 ‘테크노 봉건주의’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루파키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영지’를 독점하여 사용자들을 ‘농노’와 같이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지만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한 채 ‘디지털 영주’들의 지대 창출에 기여할 뿐이다. 산업자본가도 상품을 팔 때마다 디지털 영지에 수수료를 내는 ‘봉신’에 불과한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⁷⁾

하지만 바루파키스의 주장은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단면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 경제의 틀 안에서만 본다면 봉건제와 유사한 면들이 존재하지만, 생산기반과 과학기술 기반에 있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고려한다면 ‘지적독점자본’의 지구적 작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 즉 자본주의가 운명을 다하고 테크노 봉건주의로 이전했다기보다는 현대 자본주의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조응해 양육시킨 작동방식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 2.0은 인공지능 및 퀀텀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국 경제를 일신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갱신하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의 하이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을 이끌 능력을 보유한 엘리트들이 기획자이자 직접적 수혜자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노동자 친화적 경제’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 선전의 냄새가 짙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수의 하이테크 엘리트가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여 다수의 미개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폴리즘’의 그림자가 트럼프 정부 2.0 위에 짙게 드리워 있다.⁹⁾ 이들이 추구하는 ‘황금시대’는 인공지능이나 퀀텀컴퓨팅을 지배하는 새로운 하이테크 엘리트의 황금시대이기 때문이다.

나가며: 테크노 권위주의·테크노 패권주의

트럼프 정부 2.0을 지탱하는 MAGA세력은 백인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 및 정치적 신뢰, 사회적 통합력이 와해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반의 데이터·AI·위성 기술만 비대해지고 있다. 제국의 여명기, 군산복합체와 빅테크의 결합이 테크노 권위주의·테크노 패권주의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6) 피터 틸이 창립한 시기업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산더 카프가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Alexander Karp and Nicholas W. Zamiska, The Technological Republic: Hard Power, Soft Belief, and the Future of the West, Crown Currency 2025.
7) Yanis Varoufakis, Technofeudalism: What Killed Capitalism (Vintage, 2024)
8) Mateo Crossa, & Cristobal Reyes, “‘Technofeudalism’ and ‘Intellectual Monopoly Capitalism’: A Critical Review,”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December 29, 2025). <https://doi.org/10.1177/04866134251391533>
9) 아리스토폴리즘에 대해서는 Patrick J. Deneen, “Aristopopulism: A Political Proposal for America,” First Things 2019.3.20. 아리스토폴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는 초국적 극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유정애, 「초국적 극우연대와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 『창작과비평』 (2026년 봄호) 참조.

기조발표2

압박받는 민주주의
: 지정학적 공포를
민주적 회복력으로 전환하기



선 시우화 | 대만 국립칭화대 사회학연구소 박사

대만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의 여성주의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그의 연구는 특히 대만-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젠더, 이주, 국경 정치의 교차성을 탐구한다. 2·28사건 유가족 여성들에 대한 그의 연구는 국가폭력에 대한 젠더적 분석을 통해 역사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Awakening Foundation 전 대표를 지냈으며, 학문적 엄밀성과 여성주의 실천을 결합해왔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사회가 복합적인 지정학적·안보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압박받는 민주주의 : 지정학적 공포를 민주적 회복력으로 전환하기

선 시우화 | 대만 국립청화대 사회학연구소 박사

친애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자 여러분:

이곳 광주에 서게 되어 깊은 영광입니다. 1980년 5월,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려 했던 국가 폭력에 맞섰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진 것은 시민적 주체성에 대한 굴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주의 미래가 군사 정권의 지시나 먼 강대국들의 전략적 냉담함이 아니라, 바로 광주 시민들에 의해 쓰여질 것임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광주의 유산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헌법적 장치가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권력이 강요하는 규칙들을 거부하는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는 취약한 실천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는 새로운 “민주적 압박(democratic compression)”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적 마찰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면서 ‘사회가 그 민주적 영혼을 잃지 않고 어떻게 국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전략적 경쟁에서 민주적 압박으로

미중 경쟁의 심화는 아시아를 이분법적 구도의 풍경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많은 동아시아 사회는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라 최전선이나 완충지대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회적 침식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인간화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오직 “안보” 아니면 “위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동료 시민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생존의 장애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제가 “민주적 압박”이라 부르는 현상을 낳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확장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이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무거운 무게에 의해 짓눌리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적 실험, 장기적 개혁, 그리고 다양성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좁아집니다. 우리의 민주적 공간이 반드시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의 언어와 외부 위협의 존재로 인해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만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 압박은 특히 절실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정보적, 외교적 압력 아래 대만의 정치 영역은 생존이라는 지상 명령에 의해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적 선택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위협이 에너지 전환에서 사회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안을 국가 안보라는 렌즈를 통해 보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적 공간을 좁혔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압력은 “안보 논리”가 우리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얼마나 침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집단이 의견을 달리함에 따라 내부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안보화, 공포, 그리고 내부 적의 메아리

이 경쟁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일상생활의 안보화(securitization)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교육, 심지어 공공 보건까지 주로 “안보”의 문제로 프레임이 짜일 때, 공포는 통치 원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열린 민주적 토론의 영역에서 전략적 필요성의 그림자 속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은 불충이나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부당하게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만, 뉘앙스나 외교적 복잡성에 대한 요구를 낙약함의 징표로 치부하는 경향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민주적 협상이 일어나는 공간인 중간 지대를 침식시키며, 동료 시민을 공동체 파트너가 아닌 잠재적 위협이나 적으로 재정의 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평화에 대한 재고: 페미니즘적 관점

압박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재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압박 속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나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페미니즘적 관점은 “전면전”과 “완전한 굴복” 사이의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대만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요당하지 않을 만큼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자각적인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대만에서의 사회적 진보, 예를 들어 동성 혼인 법제화와 인권 및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옹호는 규범적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압력 속에서도 진보적인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을 보여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돌봄이라는 인프라: 회복력의 사회적 기반

지정학적 경쟁이 우리의 공간을 압박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할까요? 저는 회복력이 “인프라로서의 돌봄(care as infrastructure)”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료, 보육, 공동체 신뢰와 같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도로, 교량, 무기, 전력망만큼이나 국가의 기능과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진정한 회복력이 인간 네트워크의 강점과 공동의 웰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지역사회 기반의 대비 프로그램, 풀뿌리 조정 네트워크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돌봄 중심의 관행이 어떻게 민주적 회복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국가 주도의 명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신뢰를 통해 정보 왜곡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여성들과 젠더 중심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민간 방위와 같은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훈련 워크숍과 응급 대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은 안보가 사회 전반에 분산되고 일상의 대비 속에 내재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여성 시민 단체들은 또한 갈등 시기에 다양한 취약 계층의 필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화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보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즉, 갈등 상황에서 소외된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특수 훈련을 포함한 자원과 역량이 해당 공동체에 갖춰지도록 보장하며, 투명하고 포용적인 안보 접근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국방 전략이 모든 사람을 고려할 때만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결론: 회복력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는 우리로 하여금 중앙 집중식 통제를 우선시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에 저항해야 합니다. 광주의 교훈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지켜집니다.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1) 회복력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하향식 방어는 압박 아래서 부서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풀뿌리 방어는 적응하고 견뎌내는 살아있는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결국 우리의 자유를 해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돌봄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사회적 신뢰는 인지전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시민들의 웰빙과 연결성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외세와 내부의 간섭이 우리를 찢어놓을 위험을 줄여주는 사회적 결을 만듭니다.

3) 평화는 적극적인 노동입니다. 우리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삶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킵니다. 다원주의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방어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방어가 중요한 이유 그 자체입니다.

질문은 단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압박”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리는 시민적 주체성과 연대의 정신에 뿌리를 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주제세션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

[사회]

오은영 |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1]

12.3 내란을 통해 본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극복방안; 시민을 중심으로

정연순 | 법무법인 경 변호사

[발표2]

디지털 독재?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론·인터넷 탄압 대응

프리아 시그델 | Hatti Hatti Nepal 공동창립자, 사회적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발표3]

빛의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태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발표1

12.3 내란을 통해 본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극복방안; 시민을 중심으로



정연순 | 법무법인 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12.3 내란을 통해 본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극복방안; 시민을 중심으로

정연순 | 법무법인 경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에 일대 위기를 불러 온 충격적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행위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신변의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용기로 몇 시간 만에 제압되었고, 이후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4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은 전 세계적인 찬사와 감동을 이끌어낸 한편의 드라마 같은 헌정 수호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성숙한 시위 문화와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으나,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 또한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스스로 쟁취해냈기에 어떤 선 아래로는 무너질 리 없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던 민주주의가 결정적 위기를 맞이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 측면과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 1조 제 1항,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언 명제를 놓고 이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2.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그 위기

헌법 제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에서의 ‘공화(共和)’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념(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 헌다1결정)’에 기초하며, 구체적으로 권력분립, 법치주의에 의한 통치, 주권재민, 복수정당제나 선거를 통한 의회선출제도, 사법부의 독립과 지방자치와 같은 제도로 실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공화국 시민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 즉 주권자의 존재이다.

12. 3 내란은 이 요소에 여러 균열이 발생했음을 드러내 보였다.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생겨났다. 첫째는 대통령 윤석열이었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주권자에 헌신할 의무를 가진 관료 엘리트들, 세 번째로는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취소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례없는 초고속 재판을 감행함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법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계엄 이후에도 내란범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화주의와 적법절차를 부정하며 법원을 습격한 사람들, 소위 극우의 출현에 있었다.

그 출현과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으로 민주화 이후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반목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갈등이 어떤 부리에서 어떻게 증폭되었는가는 여러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히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보수 정당, 특정 권력자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란 과정에서 출현한 ‘두 개의 광장’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심리적 내란 상태를 남겼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근간으로부터 공화주의를 부정하는 자들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3. 다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내란 극복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이다. 계엄 시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여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계엄법이 개정되었고, 군의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군인복무법도 개정 추진중이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헌법가치 교육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도 2026. 3.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공화국의 시민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갈지의 문제이다. 12. 3. 사태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면, 불과 몇시간만에 내란은 법적으로 그 절차를 준수하여 제압되었음에도 그 뒤 수개월간 민과 민이 서로 맞서는 두 개의 갈라진 광장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게 놓여진 과제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공화주의를 살펴 본다. 공화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이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삶의 주체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의 자유는 권력에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공적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가시성이 보장된 자유를 의미한다.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다원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삶의 조건 위에서 비로소 공화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진다.

공화국의 시민은 단지 국적과 같은 법적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덕성을 실천하는 주체여야 한다. 공화주의의 ‘덕성’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한 태도와 실천을 뜻한다. 따라서 공화국 시민은 혐오와 차별, 배제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 조항과 제11조의 평등권은 이러한 공화주의의 기초를 구성하며, 이는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공화국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약속이 삶의 실제 현장에서 실감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의 마련에만 있지 않다. 시민 개개인의 의식과 실천에 달려 있다. 그 지점에서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아 온 이들의 발언과 참여는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common good)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이다.

4.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위한 실천

제도적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시민적 덕성’에 있다. 민주주의가 화석화되지 않으려면 공화국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을 수호하는 권력기관들의 헌법 준수 의지와 실천력 역시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 본다.

첫째,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방어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시로, 광주 5. 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불의에 항거해야 할 윤리적 헌법적 의무가 공화국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규정한다.

둘째, 극우세력을 해소하고 갈등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숙고하고 실천해야 한다. 엄정한 처벌, 자율적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언론환경, 혐오 선동의 금지 등은 구체적 실천 방안중 하나이며, 무엇보다도 사회 정치적 쟁점의 촉발시 즉각적인 대결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공론장과 숙의 문화, 중재자의 등장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지와 적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자나 적이 아닌 '손님'으로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자리를 넓히는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나 특정 제도가 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진정한 시민 참여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뿌리를 두어 확장되어 가야 한다.

셋째, 공화국의 시민 자격을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아 법령과 제도, 문화를 정비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시민에게 덕성을 요구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를 지키며 공동체를 수호하는 책임의식, 이성적 태도로 숙의에 참여하는 실천적 자세이다. 이러한 덕성을 가진 시민의 존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다. 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 민주시민 교육, 삶의 경제적 조건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

5. 맺음말

분열을 극복하는 힘은 상대를 적이 아닌 '함께 정원을 가꾸어나가야 할 동료 정원사'로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 극우라고 불리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광장을 가꾸어야 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덕성을 갖추도록 이끌어내는 일은, 이 문제를 고민하는 나, 우리와 시민단체들이 먼저 그 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타인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먼저 나 자신을 가리켜야 한다. 끝없는 대화와 환대, 특정 제도나 이념을 지고지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건강한 회의주의, 단순한 구호정치를 넘어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질적 참여의 증진, 상대를 적으로 몰지 않은 언어 사용과 태도의 유지, 혐오표현과 선동을 거부하는 것은 먼저 자기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실천 행위이다. 이는 제도와 정치등 거대한 담론에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역설적으로 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위기와 제 2의 내란을 막는 가장 큰 방어책이 될 것이다.



발표2

디지털 독재?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론·인터넷 탄압 대응



프리야 시그델 | Hatti Hatti Nepal 공동창립자, 사회적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프리야 시그델은 네팔의 사회적기업 Hatti Hatti Nepal 공동창립자이자 대표로, 소외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사회적 역량 강화 활동을 이끌고 있다. 청년 체인지메이커이자 사회적기업가로 국제무대에서 네팔을 대표해왔으며, 여성 리더십과 직업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연사이자 활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Miss Earth 2018 세미파이널리스트이자 Kantipur Television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독재?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론·인터넷 탄압 대응

프리아 시그델 | Hatti Hatti Nepal 공동창립자, 사회적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9월 8일의 Z세대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팔 민주주의의 여정 속에서 이번 시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년 제2차 민중운동(People’s Movement II)은 군주제를 종식시켰고, 2015년 헌법 제정으로 이어져 네팔을 포용과 비례대표성에 기반한 연방민주공화국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과제는 여전히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한 네팔의 점수는 지속적인 구조적 문제와 낮은 대중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대규모 청년층 이민은 국가의 사회적 구조를 계속 재편하며, 젊은 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물리적·정서적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는 정치 지도층과 청년들 사이에 세대 간 격차를 넓혔으며, 이것이 시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위는 고립되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이후 청년 주도의 운동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커지는 불만을 반영해 왔습니다. 네팔에서 이러한 정서는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비판, 정체성, 그리고 동원을 위한 플랫폼이 된 디지털 공간에서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규제, 감시, 미디어 통제에 대한 우려 또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청년들 사이의 커지는 좌절감을 토대로 형성되었습니다. 9월 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적 흐름, 특히 필리핀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물결이 ‘네포 베이비(nepo baby, 특권층 자녀)’ 담론을 공론장으로 가져왔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는 젊은이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정치인 자녀들과 정부 계약업자들의 눈에 보이는 특권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분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이는 빠르게 대중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일부 정부 지지자들은 이러한 좌절감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젊은이들에게 부모가 가난하다면 제도가 아니라 가족을 탓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분노를 일축했습니다. 이 반응은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압박 속에서 계정을 비활성화한 반면, 다른 이들은 사과하지 않고 버티며 대중의 원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공간 자체도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틱톡(TikTok)은 이미 정부에 의해 제한된 상태였고, 대화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플랫폼들도 통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전역에서 널리 논의되던 내용들이 네팔의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충분히 표면화되지 못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일부는 이 문제를 “소셜미디어에서 통제 불능이 된 Z세대”로 프레임화하기 시작했지만, 실상은 축적된 좌절, 불평등, 그리고 책임 부재라는 훨씬 더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9월 8일 그 현장에 있었고, 많은 이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운동은 Z세대가 주도했지만 그들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네팔의 변천사를 목격하고 제도 안에서 점점 더 무력감을 느껴온 저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도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라고 느꼈습니다. 시위 자체는 평화로웠습니다. 최전선에서 이끄는 이들, 군중의 활력을 돋우는 이들, 그리고 단순히 연대하기 위해 온 이들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그 의도는 집단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일은 급격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악화였습니다. 군중 통제 조치는 실패했습니다. 시위대들은 단순히 해산시키려는 의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표적이 되었으며, 부상은 머리와 상체에 집중되었습니다. 항의의 목소리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국가의 대응 혹은 대응의 부재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총리와 정부는 대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동시에 미디어 보도 프레임은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운동을 촉발했던 실제 원인으로부터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는 대중의 인식에 날카로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9월 8일의 사망과 부상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의 감정적, 정치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디지털 공간의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 공간은 감시, 내러티브 프레임 형성, 정보 왜곡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동시에, 저항의 도구로서 분권화된 소통과 진실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9월 9일은 더 이상 시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9월 8일의 슬픔은 집단적 분개로 바뀌었습니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뒤이은 것은 국가적 규모의 혼란, 인프라 파괴, 대중의 분노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격, 그리고 질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총리는 결국 사임했고, 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잠시 동안 네팔은 명확한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란히 또 다른 전투, 즉 내러티브를 둘러싼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보도는 주로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운동을 “광란의 Z세대”로 빠르게 낙인찍으면서도 이 지점까지 오게 만든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은 간과했습니다. 동시에 신원 미상의 집단에 의한 행동들이 시위대의 책임으로 돌려지면서 운동의 정당성은 더욱 왜곡되었습니다. 네팔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되기 시작하자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시위의 오래된 영상들이 네팔의 영상인 것처럼 유포되었습니다. Z세대 시위대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시위가 단순히 소셜미디어 제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시민 행동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저에게는 책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플랫폼들을 통해 저는 이러한 허위 내러티브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며, 이 운동의 본질이 책임, 부패, 그리고 구조적 실패에 있다는 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별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힘을 얻었습니다. 제 콘텐츠는 네팔 전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객들에게도 도달하여,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1,000만 건 이상의 **반응(engagement)**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은 중요한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단순한 소통 채널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내러티브를 왜곡하고, 주의를 돌리고,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한편, 현실을 기록하고 저항하며 재구성하기 위해 다시 탈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네팔의 거버넌스 동향은 디지털화와 중앙집중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프레임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발전은 감시, 데이터 통제, 그리고 시민 공간의 축소에 대한 중요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규제의 모호성 증가, 디지털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독립 미디어에 대한 압박은 표현의 자유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골적인 검열보다는 시스템과 내러티브를 통한 미묘한 방식의 통제가 자주 행사됩니다. 미디어 기관들은 점점 더 심한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형 소통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약화시키고 미디어 지형 내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시위 기간 동안 오보와 선택적 내러티브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정보 생태계가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부터 표면적인 사건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은 민주적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분권화된 대화와 동원을 위한 공간을 창출합니다.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독립 미디어를 지원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Z세대 시위는 통제와 참여 사이의 더 깊은 민주주의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디지털 권위주의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억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내러티브, 그리고 접근 권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작동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공간은 이러한 역학 관계에 도전하고 민주적 참여를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러한 공간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공간들을 형성할 힘을 갖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발표3

빛의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 태 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시민사회추진위에 소속되어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빛의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태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1. ‘빛의 혁명’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켜냈으나,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생과 경제의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정치권의 불신과 반목이 시민 참여와 성숙한 공론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던 유럽의 상당수 나라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 극우세력이 집권했거나 집권 가능한 수준으로 세력화한 가운데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와 공론장의 붕괴, 민주적 공간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내외의 악조건 속에서 ‘빛의 혁명’에서 확인된 국민의 주권 의지와 역량을 지속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 국가기구 전반의 민주적 회복력 강화가 시급하다.

그동안 시민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국민(주민)참여자치 제도화’, ‘숙의 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활성화와 민관협치’, ‘주민자치 확대와 마을만들기’, ‘사회연대경제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시민참여 보장 및 촉진 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와 퇴행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혁과 더불어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책참여 제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탄핵 응원봉 집회를 주관했던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국면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12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정치사법행정분야 3대 우선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한편, 탄핵 직후 대선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시활넷)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본부와 △국민공회 운영,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에 관한 패키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대회의와 시활넷의 회원단체들은 이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분산되고 통제 위주로 관리되는 시민참여·시민사회 지원 촉진 업무를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참여‘보장’ 체계로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시민참여 종합 추진체계가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안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대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협약을 기초로 종합적인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된 논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정식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두 달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시민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할 종합적인 추진체계로서 시민참여에 관한 국가행정위원회,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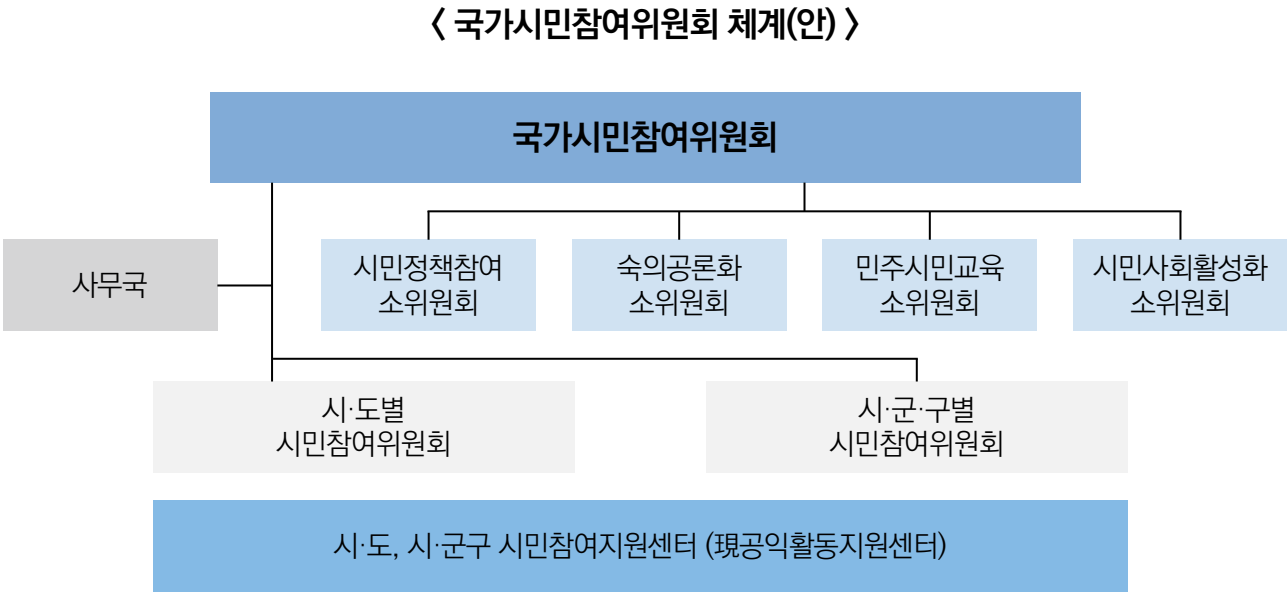
시민참여기본법이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 참여의 영역은 정책 참여 및 숙의공론과정 참여, 민주시민교육 참여, 자율적인 시민사회활동 참여 등 크게 4가지 영역이다.

2.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현황

주요내용

- 목적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 민주주의 발전, 공공이익 증진,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
- 시민의 정의
 - 국민 또는 주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포함)
- 시민참여의 정의
 - 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경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 특히 △정책결정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 참여
- 기본 원칙
 - 국가 및 지자체는 시민참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사회적 요인을 개선하는 등 기본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추진
- 시민의 권리
 -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지원방안 강구
 - 이에 수반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
-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시민참여 계획 수립 및 이행
 - 시민참여 조사·연구 및 통계 구축
 - 시민참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시행
 - 시민참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민참여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법·제도 개선, 정부 내 정책·업무 협력, 조사·연구, 자원 확보,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위원회, 5년) 및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1년) 수립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개요
 - (성격)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명(민간, 차관급)을 포함하여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4개 소위원회) 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에 관한 4개 소위
 - (사무국) 위원회 활동 지원 및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 (지원조직) 중앙-지역 간 유기적 협업·교류 강화를 위해 시·도 시민참여위원회(행정위원회) 및 시·군·구 시민참여위원회 또는 시민참여지원센터 설치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기능
 - 종합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점검 및 평가
 - 시민참여 정책·사업 집행 중복 여부 등 점검 및 조정
 - 시민참여 종합 지수 개발, 현황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 숙의공론화 모델 연구개발, 유형별 표준지침 마련, 정보 관리·분석평가
 - 국가 및 지자체 숙의공론화 운영 지원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점검
 -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 시민사회조직 현황조사 및 통계 구축
 -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투명성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요청 등



- 입법현황**
- 기본법 발의
 - 2025년 12월 31일,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현황
 -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
 - 지방선거 이후 구성될 24대 후반기 국회에서 2026년 하반기 중 처리 예정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합의와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제안으로 2025년 12월 17일 구성된 시민사회 입법 추진기구
 - 전국 12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중(2026. 3. 24 기준)
 - 사무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civilnet.net/>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포커스세션

[사회]

이 유 경 | 국제분쟁전문기자

[발표]

베네수엘라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과제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 베네수엘라 언론인, 디지털 권리 활동가

[발표]

이란: 전쟁의 지정학과 민주적 변화의 전망

시아바시 사파리 | 서울대 아시아문명학부 교수

발 표

베네수엘라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과제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 베네수엘라 언론인, 디지털 권리 활동가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는 베네수엘라 출신 언론인이자 인권옹호가, 디지털 권리 활동가이다. 시민저널리즘 플랫폼 ReporteYa의 공동 창립자로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권리, 허위정보 대응, 국가폭력 기록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Transparencia Venezuela 이사와 전 Internet Society 베네수엘라 지부 회장을 지냈다.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아왔으며, 2024년 Clooney Foundation for Justice 알비스상을 수상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베네수엘라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과제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 베네수엘라 언론인, 디지털 권리 활동가

베네수엘라의 현재 역사적 시점은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제로 정의됩니다. 이 문서의 핵심 논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 역사에 뿌리를 둔 민주적 기억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심각한 제도적 붕괴, 사회적 트라우마, 그리고 고착화된 권위주의 구조라는 조건 속에서 민주적 제도를 재건해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은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정의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과, 명확한 전례나 청사진이 없는 정치적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이중적이고 종종 상충하는 명령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논거의 핵심에는 비판적 가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전환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력의 교체나 단절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민주적 재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와 같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조차 그 자체만으로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구조적 역학을 해결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은 수십 년간의 제도적 침식, 정치적 갈등, 그리고 적응형 권위주의 전략 에 의해 형성된 더 넓은 궤적 안의 순간들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가설은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단순화된 서사에 도전합니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오로지 '차비스모(Chavismo)'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 모델의 누적된 실패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연한 부패,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그리고 석유 의존적 경제는 불평등과 취약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내부로부터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해체할 수 있는 정치 운동의 부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주의는 외부의 변칙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약점에 뿌리를 둔 발전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미래에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만 하는 전환은 민주주의 붕괴라는 동일한 사이클을 재현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문서는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진 피해의 규모와 성격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분석 틀 내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사회적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무력 충돌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과 맞먹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제 수축, 대규모 이주, 사회적 해체를 겪었습니다. 이주를 통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의 손실과 GDP의 급격한 붕괴는 물질적 쇠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삶의 궤적, 그리고 국가 역량의 파편화를 의미합니다.

이 분석에서 도출된 중앙 논거는 지속적인 정치적 결정이 집중된 권력 및 책임 부재와 결합될 때 역사적 규모 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주로 제재나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외부 압력의 탓으로 돌리는 지배적인 국제적 서사에 도전합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문서는 그것들이 붕괴의 깊이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체계적인 부패와 정치 권력과 연계된 불법 경제의 공고화를 포함한 권위주의 통치의 내부 역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특히 중요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적 권위, 경제적 통제, 그리고 범죄 활동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마약 밀매, 불법 광업 및 기타 불법 관행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출현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융합은 자원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구의 상당 부분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기는 단순한 거버넌스 실패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구조가 약탈적이고 배제적인 관행으로 부분적으로 재편된 더 깊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 결과는 다차원적인 용어로 설명됩니다. 초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공공 서비스의 붕괴는 생활 여건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지만, 문서는 그 영향이 물질적 결핍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트라우마 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는 억압과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대의 침식,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붕괴, 그리고 미래 전망의 상실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누적된 피해는 베네수엘라의 전환이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거를 강화합니다.

정의의 문제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임의 구금, 고문, 정치적 박해, 그리고 초사법적 살인을 포함한 인권 유린의 규모와 체계적 성격이 모든 전환 과정에서 근본적인 딜레마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정의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문서 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은 정치적 협상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의를 타협하는 합의는 정당성을 훼손하고 면죄부를 영구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서의 가장 중요한 분석적 긴장 중 하나인 정의의 필요성과 정치적 변화의 실질적 요구 사항 사이의 공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시된 가설은 새로운 위험을 생성하지 않고는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희생하는 전환은 단기적으로 정치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학대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와 인센티브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반대로, 정치적 퇴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타협 없는 정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전환의 가능성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는 정의나 전환 중 어느 하나도 그 실질적 의미를 잃지 않도록 이 긴장을 헤쳐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억압적 구조의 지속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문서는 지도부의 변화가 반드시 체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제, 감시, 그리고 강압의 장치는 여전히 온전하며, 권위주의적 관행이 새로운 권력 구성 하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민주적 전환이 행위자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적 논리의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뒷받침합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의 국제적 차원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주를 통해 지역 안정을 해치고 부패 및 불법 경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외부 행위자들, 특히 미국은 중요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서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특정 국제 행위자들이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외부 압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내부 프로세스와 신중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논거는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적 압력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그 자체로 긴장을 유발합니다. 압력은 변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저항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협상은 전환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지만 면죄부나 정치적 조작의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사이의 균형은 권력을 잃는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또한 문서는 정치 개혁의 선행 조건으로서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순차적 접근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장 없는 안정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복구하고 내부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외부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권위주의의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핵심 질문이 안정이나 변화냐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안정이 진정한 민주적 변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이 광범위한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의미 있는 전환의 기초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두려움 없이 조사하고 보도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적 개방성의 핵심 지표로 제시됩니다. 미디어 통제와 검열이 만연했던 베네수엘라 맥락에서 이 공간의 복원은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 민주적 재건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문서는 공식적인 정치적 전개를 넘어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범 석방 및 정보 제한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의 사용을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텍스트는 베네수엘라의 전환을 개방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과정으로 설정합니다. 결정론적이거나 선형적인 서사를 거부하고 경쟁하는 힘, 불확실한 결과, 그리고 진행 중인 투쟁에 의해 형성되는 보다 가변적인 이해를 지지합니다. 결론 논거는 베네수엘라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억과 누적된 피해의 조합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이중적 출발점은 성찰적이면서도 변혁적인 형태의 재건을 요구합니다.

문서는 확정적인 답변보다는 일련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되며, 민주적 전환이 고정된 종착점이 아니라 지속 적인 협상과 학습의 과정이라는 핵심 전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에는 정치적 실용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파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합의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변혁과 적응형 권위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국제 행위자들의 책임과 단순화나 도구화 없이 민주적 전환을 지원해야 하는 더 넓은 과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종 가설은 분석적이면서도 규범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성취되었을 때만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방어되고 형성될 때도 공고해집니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 분기점, 즉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의 고갈과 새로운 시스템의 불완전한 건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이 전환의 순간에 내려진 결정들이 이 나라가 과거와 단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과거를 재현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인권 옹호가, 저널리스트, 20년 경력의 사이버 액티비즘, NGO 자문 및 디지털 커뮤니티 구축 전문가. 베네수엘라-스페인 국적. 2019년 국제 앰네스티 선정 양심수.

발 표

이란: 전쟁의 지정학과 민주적 변화의 전망



시아바시 사파리 | 서울대 아시아문명학부 교수

시아바시 사파리는 이란계 캐나다인 정치학자이자 서울대학교 서아시아연구소 교수이다. 이란 정치사상, 중동 정치, 탈식민 연구 분야에서 두 권의 저서와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 및 국제 언론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지정학과 민주적 변화의 전망

시아바시 사파리 | 서울대 아시아문명학부 교수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하여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전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폭격 작전의 규모와 강도는 최근의 대부분의 전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칠 만에 동네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었으며, 석유 시설, 발전소, 수도 기반 시설 등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황폐화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진행 중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고립되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25년 6월 미군 폭격기가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한 사건의 직후에 이어진 것입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 사이의 긴밀한 공조 보고와 더불어, 외교적 회담이 단지 시간을 벌거나 상대를 오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은 이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대신, 이 전쟁은 의도적이고 확대되어 온 캠페인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란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공식적인 명분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제한하려 노력해 왔으며, 특히 1979년 혁명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였던 군주제가 새로운 정치 질서로 대체된 이후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를 지원하는 것부터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며 지속적인 군사 조치 위협을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은 이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역적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널리 믿어지는 유일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유사한 능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행동해 왔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그 실제 범위가 어떠하든 단순히 안보상의 우려가 아니라 기존 위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란은 영구적으로 제약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그에 상응하는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지역 질서에 내재된 깊은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이 갈등은 글로벌 경쟁 구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과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 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새로운 긴급성을 더했습니다.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유대를 흔들고, 세계 에너지 흐름의 중심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오직 지정학적 관점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전쟁터나 전략적 자산이 아닙니다. 이란은 내부적 긴장과 열망으로 점철된 사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2009년의 녹색 운동부터 2022년의 '여성-생명-자유' 봉기에 이르기까지, 시위의 물결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그리고 사회적 제약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세의 의제가 아니라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가리킵니다.

전쟁은 그러한 가능성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역사는 외부의 군사적 개입이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조차 종종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를 육성하기보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강경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며, 내부 개혁의 여지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리비아 같은 국가들의 황폐화는 이에 대한 극명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와 기반 시설에 떨어지는 폭탄은 자유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의 취약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는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아시아 민주주의세션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

김희숙 | 전북대 동남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1]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

유예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발표2]

국경 분쟁의 정치적 기획과 동원: 캄보디아 사례

박진영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공동연구원

[발표3]

자유, 범죄, 폭력, 저항: 미얀마 국경지대의 양면성

박재현 | 서강대학교 게페르트국제학부 조교수

발표1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



유 예 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태국 람빵주 매머 석탄화력발전소를 사례로 에너지 인프라 갈등의 정치생태학을 연구하여 치앙마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태국 및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개발과 갈등, 환경정치, 에너지 전환이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

유 예 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1. 서론

태국의 2025년은 정치적 불안정과 다양한 위기가 중첩된 시기였다. 패당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의 해임과 연립정부의 붕괴, 과도기 소수 정부의 구성과 의회해산,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권력이 안정적 통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태국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유예지 2026).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었다.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긴장 고조는 외교·안보 사안을 넘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국내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치적 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 2월 8일 총선 결과로 이어졌으며, 보수정당인 품파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의 압승은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선택을 반영하는 동시에, 브라차촌당(People's Party)으로 대표되는 진보·개혁 세력의 정치적 공간이 축소된 상황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을 단순한 외부 안보 위기로 보기보다, 국내 정치 질서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국내 정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안보 위기 프레임이 정치적 정당성의 재구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국가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nation)’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수 정치 세력 역시 이러한 담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조정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이어 태국의 군부와 보수 세력이 위기 상황 속에서 통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가는 과정을 세 가지 측면 - 민군 관계에서의 군부 우위 확보, 민족주의 담론의 확산과 여론 형성, 군부의 ‘국가의 수호자’ 이미지 강화 -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태국 정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간략히 논의한다.

2.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의 기원과 전개 과정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식민지 시기 설정된 불명확한 경계에서 비롯되었다. 1904·1907년 협약은 당락 산맥 분수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하기로 했으나, 1908년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는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포함시키며 이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양국은 서로 다른 지도 기준을 사용하며 국경 확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공동 국경위원회를 통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상당 구간에서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갈등은 브라삿 따 므안 톰(Prasat Ta Muen Thom) 지역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고, 총격전과 군인 사망으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외교적 협의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지도자 간 통화 유출을 계기로 갈등은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후 대규모 무력 충돌과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서 분쟁은 전면적으로 확산되었고, 임시 휴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특히 2025년 갈등은 과거보다 범위와 강도가 크게 확대되어 공습을 포함한 고강도 군사 충돌로 전개되었으며, 대규모 인명 피해와 주민 대피를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보 위기 인식을 강화하고, 군부 역할 확대와 민족주의 담론의 부상, 정치적 정당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

1) 민군 관계에서의 군부 우위 확보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태국 정치에서 문민통제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사례였다. 갈등 과정에서 군부는 정부와 별개로 독자적 대응을 수행하고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민군 관계에서 실질적 우위를 점하는 구조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24년 해군 사령관이 정부 승인 하의 해상 국경 협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콧섬(Koh Kood) 영유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군이 외교 사안에서도 독자적 입장을 표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갈등 국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되었다. 군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긴장 완화 기조와 달리 강경 대응을 지속하며 국경 통제 조치까지 독자적으로 시행했다. 반면 패당탄 총리의 비공식 통화 유출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켜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강경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왕실의 공개적 지지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은 위기 상황에서 군부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 구조를 재확인시켰으며, 민군 관계의 비대칭성과 군부 우위를 한층 공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 민족주의 담론의 동원과 여론의 형성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하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군은 전통적 브리핑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태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ประเทศไทยรักสงบแต่ถึงรบไม่ขลาด)”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중심으로 감정적 동원과 집단적 결속을 조직했다. 육·해·공군은 전투 준비 태세와 군인 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하며 대중 참여를 유도했고, 이러한 ‘해시태그 정치’는 보수정당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정치권 전체의 강경한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했다. 여론 역시 이에 호응하며 재편되었다. 6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에서 군에 대한 신뢰는 약 86%에 달했지만, 정부와 외교부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났고, 군의 핵심 메시지인 “태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에도 약 88%가 동의했다. 7월 충돌 이후에는 군 신뢰가 약 95%까지 상승하고 정부 불신이 더욱 심화하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대중은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면서도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력 증강과 같은 강경 대응에도 상당한 지지를 보였다. 대외 인식에서도 캄보디아를 불신하거나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며, 민족주의적 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3) 군부의 '국가의 수호자' 이미지 강화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군을 '국가의 수호자'로 보는 이미지를 다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갈등 이전까지는 특히 청년층과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군부 비판이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비판은 약화하고 군의 수호자 이미지는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군은 자신을 국익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존재로 제시했고, 이러한 도덕적 권위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정책 선택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공동 개발이나 협상과 같은 온건한 해법은 '배신'으로 비판받으며 정치적 공간이 좁아졌고, 영토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역시 점차 어려워졌다.

이 과정은 왕실-군부-보수정당으로 이어지는 기존 권력 연합을 더욱 공고히 했다. 보수정당들은 군부의 민족주의 캠페인에 적극 호응하며 안보 중심 메시지를 공유했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영토 문제에 대한 상호 책임 인정이 용인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군부 비판 세력도 입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브라차촌당의 전신인 까우플라이당(Move Forward Party)의 당대표였던 피타 림자른랏(Pita Limjaroenrat)은 과거 군 비판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 이는 안보 이슈가 정치적 중심 의제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2025년 국경 갈등은 군부의 제도적 영향력뿐 아니라 상징적 정당성까지 강화하며, 군 비판 담론의 공간을 이전보다 축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태국 군부와 보수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 기반을 공고화하는 조건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국내 정치 질서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과 이를 둘러싼 담론 및 여론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경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정치적 경쟁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갈등 과정에서 군부는 위기 대응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며 제도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고, 민족주의 담론의 확산과 결합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수호자'라는 군부의 이미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 다시 전면화되었으며, 이를 비판하는 담론은 점차 제약을 받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발언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안보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간 관계와 정치적 경쟁의 조건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태국의 사례는 군부의 영향력이 제도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담론과 여론,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의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메커니즘이 이후 정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거나 변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이다. 2026년 2월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경 갈등이라는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강화된 민족주의 담론과 권력관계가 장기적으로 고착될 것인지,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재조정될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발표2

국경 분쟁의 정치적 기획과 동원 : 캄보디아 사례



박진영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공동연구원

한국동남아학회 한-아세안협력기금 프로그램 매니저,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겸 국제연대 담당자, 아시아여성노동자회 프로그램 간사,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아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였다. 코넬대학교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노사관계 제도 변화에 국제사회가 미친 영향을 비교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국경 분쟁의 정치적 기획과 동원 : 캄보디아 사례

박진영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공동연구원

2025년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분쟁은 국경 분쟁의 진행 상황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국경 분쟁을 단순한 안보 위기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이 정통성 위기를 관리하고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캄보디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국경 갈등을 어떻게 정치화였는 지 살펴볼 것이다.

캄보디아 국내 정치적 상황

2025년 8월 집권 2주년을 맞은 훈마넛 정부에 대해 캄보디아 관변 언론인 크메르 타임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훈마넛 정부가 정치적 안정,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공항 및 운하 등 인프라 건설 확대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찬했다(Vibol 2025). 반면에 더 디플로맷 등의 외신들은 같은 기간 동안 캄보디아가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교육받은 총리에게 일부가 기대했던 개혁은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의류산업 이외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권위주의·부패·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사이버 사기 단지 등 구조적 문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Coffey & Conochie 2025).

이처럼 대조적인 평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시각 차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프라 건설이 일정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가계부채 및 외채 증가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캄보디아의 ‘정치적 안정’은 야당 탄압과 독립 언론 통제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검열하고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잠재운 결과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안정에는 필연적으로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훈마넛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 경제적 성과에는 이러한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캄보디아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2024년부터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사이버 사기 센터 문제 역시 압력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2025년의 태국과의 국경 갈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수사를 통해 국내 여론의 시선을 외부 위협으로 돌리고, 정권이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억압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국경 위기의 기원과 전개

캄보디아-태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프레아 비히어 사원 영유권을 둘러싼 국경 갈등은 식민지 시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04년·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은 당그렉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식민 당국이 작성한 ‘Annex I 지도’의 국경선은 이러한 합의와 배치되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지도의 오류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프랑스령 캄보디아는 해당 일대를 자국 영토로 관리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36권 2호 게재 예정 논문 “캄보디아 2025: 권력 승계 이후 다종의 위기 관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함.

캄보디아가 독립한 뒤 해당 사원과 주변 4.6km²를 둘러싼 갈등은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로 이어졌고, 1962년 ICJ는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판결했지만 주변 지역의 경계는 불명확하게 남아 이후에도 양국의 민족주의 정치와 결합한 국경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였다.

2008년 캄보디아가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한 이후 태국 내 반발과 시위대의 월경, 양측 군대의 대치·포격전이 이어지면서 2008~2011년 사이 여러 차례 무력 충돌과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2011년 아세안의 중재 아래 양국이 휴전함으로써 분쟁은 일단락이 되었으나, 해당 국경 일대는 비무장지대, 감시기구 설치 논의를 두고 양 측의 불신이 계속 되어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레아 비히어 인근은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지지 결집을 위해 활용하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Wagner 2011).

2025년 2월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발생한 최초의 충돌은, 그 자체로는 제한적 군사 교환에 불과했지만 곧 양국 간 외교·안보·국내 정치가 교차하는 본격적인 위기의 서막이 되었다. 7월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12월에 들어 양측이 다시 포격과 공중폭격을 포함한 본격적 무력 충돌을 벌이고 수십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국경 분쟁은 단기간 내 언제든 재격화될 수 있는 ‘열린 갈등’임이 재확인되었다. 12월 24일 양국 간 회의에서 추가 교전 자제와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회의 결과와 별개로 양측은 자국 여론을 의식해 강경 발언과 군사력 과시를 병행하며 분쟁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태국 언론과 정치인은 국경 교전과 드론 사건을 두고 캄보디아를 자국 영토를 침범하고 휴전을 위반한 ‘가해자’로 규정한 반면, 캄보디아 외교부와 언론은 태국의 군사 활동과 군사 구조물 설치를 2000년 양해각서와 후속 합의를 어긴 ‘침략 행위’로 비판하는 책임 공방이 지속되었다.

국경 위기의 정치화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국경 위기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했다. 우선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하였다. 태국과의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사망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정부와 훈센 상원 의장은 해당 지역이 프랑스-시암 조약(1904·1907), Annex I 지도, 1962·2013년 ICJ 판결에 따라 캄보디아 영토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국경 분쟁을 양자 협상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박정연 2025).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결정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었다. 즉, 단순한 외교·법적 절차를 넘어 훈마넛 정부가 국가 이익을 강경하게 수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기능했던 것이다. 메시지 측면에서 훈마넛 총리는 ICJ 제소를 “복잡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높은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규범과 다자기구를 능숙히 활용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중 동원 측면에서, ICJ 제소 직후 프놈펜과 주요 도시에서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대규모 연대 행진과 집회가 조직되었고,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과 식량, 물자, 장비, 의약품 보내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6월 18일 진행된 집회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Solidarity March’로 명명되고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경 방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영웅적이고 용감하다”고 묘사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애국적 관대함”으로 포장되는 한편 국가적 연대가 강조되었다(Khmer Times 2025/07/26).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서는 2025년 하반기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태국 제품과 브랜드를 겨냥한 ‘타이 제품 불매(Boycott Thai Products)’ 운동이 확산되어 PTT 주유소, 카페 아마존, 태국산 음료·생활용품에 대한 불매·불매 인증이 SNS에서 공유되었고, ‘Khmer Loves Khmer’, ‘Respect Our Border’와 같은 해시태그 아래 역사·문화·영토를 둘러싼 감정적 논쟁이 빈번히 벌어졌다. 태국에서도 캄보디아인을 ‘불법 이주민’·‘마약 스캠 가담자’로 묶어 혐오하는 표현이 늘어나면서, “국경 충돌과 함께 양국 간 ‘온라인 민족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Koh Ewe 2025).

이러한 양상들은 국경에서의 교전, 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후원 캠페인, 그리고 SNS 상의 불매운동·혐오 발화로 연계되어 서로를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오프라인 폭력과 온라인 담론이 맞물려 돌아가는 다층적 민족주의 동원 구조를 형성하였다.

국경 분쟁의 정치적 효과

이러한 국경 분쟁의 정치화를 통해 캄보디아는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훈 가문의 통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Strangio 2025). 그 과정에서 훈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 개입하면서 외교, 안보, 행정, 청년, 민족주의 동원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총리 훈 마넛은 다자기구를 통한 분쟁 관리 및 유엔 제소와 ASEAN 내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외교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둘째 훈마넛은 국방부 정보국장으로서 미국에서 정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군 정보 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태국과의 국경 분쟁 국면에서는 국경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안보 브레인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내 훈마니는 공공서비스부 장관이자 부총리로서 대중 동원을 담당하였다. 그는 집권당 산하 청년 조직(UYFC; Union Youth Federation of Cambodia)을 기반으로 민족주의 동원과 애국 캠페인을 주도해 왔으며 야당 지도자 Sam Rainsy가 청년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던 시기부터 야당의 청년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인물이었다. 2025년 6월에는 군 지원과 애국심 고취를 명분으로 한 전국적 연대 행진과 청년 동원 캠페인을 전면에서 이끌었다(The Nation 2025/06/18).

또한 6월 중순에 발생한 통화 녹음 유출 사태는 훈 센의 영향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훈센과 태국 총리 패통탄 시나왓 간 비공개 통화 녹취 일부가 캄보디아 측에서 편집본 형태로 공개되었다. 훈센은 통화 일부를 공개하며 “진실과 투명성”을 내세워 태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자국 내에서는 강경하고 노련한 협상가이자 ‘크메르 민족의 방어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태국에서는 푸어타이 정부의 안보·영토 수호 책임을 둘러싼 정치 위기를 촉발해 연정 붕괴와 대규모 퇴진 시위, 총리가 탄핵되는 결과로 이어진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원로’ 훈센의 정치적 영향력과 외교·안보 의사결정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채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박진영 2025).

이러한 것은 훈 가문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영역(외교, 안보, 행정, 동원)을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세습 권력을 유지,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훈센 왕조의 통치 메커니즘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경 분쟁은 세습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동원하는 계기로 활용되었고, 내부 비판과 사회경제적 불만을 외부의 적에 대한 민족주의 동원으로 전환시키는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했다(Vann 2025).

나가며

2025년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은 프레아 비히어와 국경선이라는 오래된 영유권 갈등의 연속이면서도, 동시에 훈마넛-훈센 체제가 직면한 위기와 모순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증폭된 정치적 위기였다. 훈 가문은 외교·안보·행정·대중 동원을 분업화된 가족 권력 구조를 통해 통합하면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책임 있는 행위자’ 이미지와 대규모 민족주의 동원을 결합하여 세습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국경은 단순한 영토 경계가 아니라, 내부 비판과 사회경제적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통치 인프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사용하는 전략은 언제든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경제 취약성과 사이버 사기, 부패와 인권 침해 등 캄보디아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국경 분쟁의 일시적 열광을 통해서 잠시 가려줄 수 있을 뿐이다. 국경 위기의 정치화는 근본적인 정당성 위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경 분쟁을 둘러싼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양국 사회에 남긴 깊은 상호 혐오와 폭력의 기억은, 향후 캄보디아-태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정연. 2025. 총격전 발생에도, 태국-캄보디아 국경 폐쇄설은 일축. 『오마이뉴스』, 6월 1일.
<https://v.daum.net/v/0eFyw58tsF>
- 박진영. 2025. 훈 센이 왜 그랬을까?: 통화 유출, 국경 갈등 그리고 정치적 계산. 『아시아브리프』 14호.
<https://snuacwebzine.snu.ac.kr/?p=9174>
- Coffey, Sue and Gordon Conochie. 2025. Cambodia's Decline Under 2 Years of Hun Manet. The Diplomat. September 17.
<https://thediplomat.com/2025/09/cambodias-decline-under-2-years-of-hun-manet/>
- Khmer Times 2025/07/26. Phnom Penh launches donation drive to support Cambodian frontline troops and displaced civilians
<https://www.khmertimeskh.com/501725465/phnom-penh-launches-donation-drive-to-support-cambodian-frontline-troops-and-displaced-civilians/>
- Koh, Ewe. 2025. Thais and Cambodians Slug It Out on Social Media, as Border Tensions Flare. BBC News, July 26.
<https://www.bbc.com/news/articles/cy9x91ewzvxo>
- Strangio, Sebastian. 2025. Cambodia Officially Requests ICJ Intervention in Thai Border Dispute. The Diplomat, June 16.
<https://thediplomat.com/2025/06/cambodia-officially-requests-icj-intervention-in-thai-border-dispute/>
- The Nation. 2025. Hun Sen's Three Sons Drive Nationalism and Key Roles in Cambodia's Political Landscape. The Nation, June 1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asean/40051423>
- Vann, Michael. 2025. The Thailand-Cambodia War Was About Shoring Up Elite Power. Jacobin, August.
<https://jacobin.com/2025/08/thailand-cambodia-war-elite-power>
- Vibol, Turn 2025. Hun Manet marks two years of leading the government. Khmer Times Aug. 25
<https://www.khmertimeskh.com/501744620/hun-manet-marks-two-years-of-leading-the-government/>
- Wagner, Martin. 2011. Lessons from Preah Vihear: Thailand, Cambodia, and the Nature of Low-Intensity Border Conflicts.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0(3): 27-59.



발표3

자유, 범죄, 폭력, 저항
: 미얀마 국경지대의 양면성



박재현 | 서강대학교 게페르트국제학부 조교수

현재 서강대학교 게페르트국제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티넷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및 사업담당을 역임하였다.
토론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2025)를 받았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자유, 범죄, 폭력, 저항 : 미얀마 국경지대의 양면성

박재현 | 서강대학교 게페르트국제학부 조교수

들어가며

최근 미얀마 국경지대는 불안정성과 범죄가 집중된 공간으로 규정되며, 지역 안보 담론에서 핵심적 문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내전으로 불안정해진 그곳은 불안정함을 악용하려 하는 국제범죄조직들이 활개치는 지역이며, 마약유통, 인신매매, 로맨스 스캠 등의 국제범죄행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지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지대는 단지 범죄의 장으로만 기능해 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더 나은 미얀마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의 터전으로 작동해 왔다. 이처럼 국경지대에는 국제범죄 활동과 사회정치적 저항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공존하고, 한편으로는 중첩되는 독특한 공간이 조성돼 있다.

이 발표문은 국경지대가 지니는 고유한 무법성 (lawlessness)에 주목해 국경지대의 범죄와 저항운동은 무법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존하고 중첩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국가 통제력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국경지대의 무법성은 국경지대에 국가 심층부와 다른 가능성의 범위를 열어 놓는다. 그곳에서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른 국가와, 그리고 국가 통제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뒤엉켜 국경지대 특유의 이중성 가득한 행위와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또, 본 발표문은 저항과 자유의 가치를 찾아 이 이중성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을 조명한다. 자칫 자극적인 소식으로 소비하고 지나치기 십상인 미얀마 국경지대가 어떻게 더 나은 미얀마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보루로 기능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공간으로서의 국경지대의 특성

국경지대의 이중성은 국가 통제력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국가 정부, 또는 국가의 통치기관을 탈취한 세력이 움켜쥔 국가 통제력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통제력 투사를 보인다. 즉, 국가는 수도와 지방 거점 촘촘히 짜여진 감시 체계와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멀어진 변두리 지역이나 야지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경지대는 자연스럽게 국가 통제가 취약하게 작동하는 공백지로 남게 된다. 국경지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맞닿는 접경부로서, 점진적으로 약화된 각국의 통제력의 끝에 자리한 공간이다. 그 결과로 국경지대는 국가의 감시와 규칙이 완전히 투사되지 못하는 영역이 된다. 필자는 이러한 국경지대의 특성을 ‘무법성’ (lawlessness)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마치 토양에 따라 과일의 맛과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무법성이 짙게 드러나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역시 그 환경에 적응하며 그에 걸맞는 고유한 규칙과 행동 범위, 즉 ‘가능성의 범위(Menu of possibilities)’를 만들어냈다.

따라 무법성이 짙은 환경은 국가 심층부와 다른 가능성의 범위를 구성한다. 첫째, 국경지대의 무법성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 권력에 보다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국가 통제력 속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열어준다. 둘째, 무법성은 국가의 통제권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국가 행위자는 국경지대에서 국가와 비등한 수준의 역량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국가는 힘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들을 찍어 누를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비국가 행위자들과 통제행위의 방식과 그 범위를 협상하게 된다 (Migdal 1988).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상 과정은 국가 심층부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논리와는 사뭇 다른 국경지대 고유의 논리와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범죄자, 저항자, 그리고 국가를 훔친 자들의 출판: 무법성의 논리와 규칙

따라서,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국제범죄단체들이 범죄단지를 조성한 과정과, 소수민족 해방과 연방민주주의를 지향한 청년들의 무장항쟁이 출현한 맥락은 동일한 가능성의 범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범죄조직과 저항세력 모두 국가 통제력이 희미한 공간을 필요로 했으며, 각기 다른 목적을 지녔음에도 똑같은 조건을 찾아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태국-미얀마 국경을 따라 형성된 범죄단지들은 강화되는 국가 통제력의 감시와 견제를 피해 더욱 느슨한 통제의 공백지를 찾아 이동해 왔다. 국제범죄집단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등 지역에서 국가의 단속을 피해 미얀마로 그들의 본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Tower and Clapp 2020). 즉, 국제범죄조직들은 국가 규제의 압력이 강해지자 그들의 범죄 활동이 ‘가능성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미얀마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이다.

국제범죄단체들이 국가를 피해 국가 통제력이 약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은 미얀마의 반군부 저항세력이 국경으로 대피하는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들은 버마의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경지대를 기반으로 한 무장투쟁을 이어왔다. 도심에서 군부의 유혈진압과 체포 위협을 피해 탈출한 학생운동가들 역시 국가 통제력이 약하고, 국가와 대립하는 경쟁세력이 존재하는 국경지대로 향했다. 모두 국제범죄조직과 같이 국가권력에 밀려 통제력이 약한 곳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편 미얀마 군부 역시 이들 사이에서 동일한 층위의 경쟁자로 존재한다. 군부는 국경지대의 여러 행위자들 중 하나로 국경의 EAO들과 휴전체제를 만들어 나중엔 더 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 여지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국경지대의 경쟁자들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했다 (Bertrand et al. 2022; Park 2025, 66).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는 동일한 무법성의 토양에서 국가 심층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국경지대 특유의 이중적인 논리와 규칙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이곳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은 조세, 징병, 공공서비스 제공 등 원래라면 국가가 독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암묵적으로 공유한다.

이처럼 국경지대에서는 행위자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칙과 가능성이 국가 심층부의 것과 다르게 구성되고 작동한다. 예컨대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범죄단지 다수는 미얀마 군부의 묵인 또는 비호 아래 유지되어 왔다. 나아가, 군부 지도층은 범죄단체들과 친 군부 민병대들의 마약 재배와 유통 등의 범죄활동을 묵인하는 댓가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상납 받는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지역안보 악화는 국가 심층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일이지만, 국경지대에서는 군부의 전략적·물질적 이득을 위해 용인되는 것이다.

연방민주주의와 소수민족 해방을 위한 저항세력들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국가 심층부에서는 쉬이 용납되지 않을 다양한 행위를 감행하며, 이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 큰 거리낌이 없다. 한 KIO 장교는 인터뷰 중 자신감 있는 어조로 “총을 쏜 자가 제일 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경지대에서 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것이다.

실제로 국경지대에서 힘은 경제적 이윤 확보로 이어진다. 다수의 EAO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가의 공식 관세체계와 통관 감시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량에 관세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한다. 동시에, 힘은 국경지대에서 폭력 행위를 통한 협상을 가능케 한다.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는 전투도 행위자들 간의 지위와 권리, 책임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활용되며, 잘 조련된 군대와 탄약 없이는 이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 EAO들은 미얀마 공식 경제에 활동하는 동시에 군부와 대결구도와 무력 충돌을 유지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다 (Park 2025). 한편으로는 군부와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지대에서의 세력 유지와 이익 분배를 위해 군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무력 충돌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은 국경지대에서 행위자들 간의 협상 방식으로 소비된다.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법성을 공유된 뿌리 삼아 가능케 된 범죄와 저항이 한데 뒤엉키면서도, 많은 국경지대 구성원들이 저항세력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경지대의 무법성으로 생존하고 번성하는 저항세력들이 미얀마 군부와 대립하며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국가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법성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아 옳고 그른 것이 혼재해 얹혀 있어도, EAO와 같은 저항세력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다하는 공간에서 교육, 보건, 개발과 같은 국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국가를 대체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얀마를 만들기 위한 보루로 자리한다.

나아가, 아무리 그 저항세력이 군부와 국제범죄단체와 한데 뒤섞여 엉켜 있더라도, 저항세력들을 구성한 개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군부에 대한 저항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탱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국경지대 청년들이 군부와 저항해 싸우고, 공동체에 봉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군사독재와 내전의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희망하며, 기꺼이 미얀마 국경지대로 뛰어든 것이다.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지대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공간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정치적 질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기획세션

판을 뒤집는 우리들의 방식

[사회]

카렐 갈랑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여는발표1]

불안을 먹고자라는 극단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권력·부의 편향성,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분열에 관하여 -
김 형 남 | 정치싱크탱크 벨리드 공동대표

[여는발표2]

아시아의 선거: 도전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무결성 강화
브리자 로살레스 | ANFREL 사무총장

[발표1]

청년 시위에서 대중 시위로: 세대적 각성
살레 우딘 시파트 | 방글라데시 국민시민당 공동사무부총장

[발표2]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
조 용 기 | 인도네시아대학교 철학과 재학생, 거리 응급활동가

[발표3]

멕시코 청년의 현실과 연대의 주거 운동: 함께 삶을 짓기로 결정한 청년들
연 정 화 |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생

[발표4]

저항과 생존 사이: 쿠데타 이후 미얀마 청년들의 삶과 고민
김 소 연 | 미얀마 유학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발표5]

세계적 흐름 속 태국 시민사회의 방향
시라폼 품퐁퐁 | 전 정치수, Ratsadon 2020 Movement 소속

여는발표1

불안을 먹고 자라는 극단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권력·부의 편향성, 불평등으로 인한한국 사회의 분열에 관하여 -



김형남 | 정치싱크탱크 밸리드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자를 맡아 활동했다. 현재 변희수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불안을 먹고 자라는 극단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권력·부의 편향성, 불평등으로 인한한국 사회의 분열에 관하여 -

김 형 남 | 정치싱크탱크 밸리드 공동대표

1. 들어가기 : ‘세대 교체’에서 ‘세계관 교체’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치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낙오하고 고통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숏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외환위기가 대표적이다. 개발독재 시절에 형성된 정치-경제 질서를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물결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자면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의 얼굴도 젊은 세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세대교체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당연히 정치권력의 세대교체는 쉽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거나 연구해 온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치 입문을 도전하지만 그만큼 실패의 쓴 맛을 보는 이들이 많으며, 입문하더라도 관심 분야,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부속품으로 취급 받기 일쑤다. 때때로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다가 정치적으로 큰 곤경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일까?

한국에 ‘청년정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2년 총선 전후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뛰어난 개인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일만으로는 권력이 쉽사리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거에 출마하고 공직자에 도전하는 ‘플레이어’가 존재할 뿐이지, 팀이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팀은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치적 팀, 정치적 결사체에 요구되는 기본 조건은 ‘세계관’이다. 당장 내일 권력을 쥐어주더라도 나름대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규정할 수 있는 힘은 세계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정치의 변화를 위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세대’가 아니라 ‘세계관’이다. 세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대는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것이다. 정치싱크탱크 VALID는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역량있는 개인을 넘어, 이들이 함께 합의하고 만들어 낸 진보적 세계관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였다. ‘전진하는 민주주의’를 모토로 행동하는 2030 청년 활동가 · 정치인 · 연구자 · 창업자의 정치싱크탱크로, 2023년 8월 최초 결성되었다.

단체명 ‘VALID’에는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유효한 전진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Victory And Love In Democracy(우리의 민주주의에 승리와 사랑을)이라는 뜻을 담았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위해 선정한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안전망’, ‘기후위기’, ‘신외교안보 노선 구축’, ‘노동’의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 생태계의 전면적인 세계관/세대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빚어낸 분열의 풍경

VALID가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7일, 100만 명의 한국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그로부터 4일 전인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시민들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를 포위하고 시위를 벌였고, 소속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전화와 계란 투척이 줄을 이었다.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일에는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였다. 여론도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겁을 먹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마침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날 밤 여의도는 KPOP 공연장이나 다름없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111일이 지난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앞 풍경은 111일 전 여의도와는 사뭇 달랐다. 경찰 기동대가 헌법재판소를 겹겹이 둘러싸고 경호하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행인의 통행이 금지되었고, 건물 옥상도 모두 봉쇄되었다.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한 헌법재판소 테러 예고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거리에서는 경찰이 만들어 둔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는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시민들이, 다른 한편에는 ‘윤석열 복귀’를 외치는 시민들이 시위를 열고 있었다. 불과 4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수백만 시민이 한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에 안도하며 노래를 부르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달리,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었다.

3. 윤석열은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켰는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본질은 정치 지도자가 ‘폭력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선언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 중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고삐를 푼 셈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보수적 유권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사회·정치적으로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행사도 용인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정치지도자는 탄핵해서 그 직으로부터 파면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치 논리에 오염된 지지자들이 세력을 불려가는 과정은 중단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로부터 탄핵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111일 간 한국 시민들은 사회의 상식선이 쉽게 무너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권좌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연일 ‘중국 정부와 결탁한 한국의 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심하여 선거 관리 시스템을 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윤석열이 내세운 계엄 선포 명분은 과거 한국의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탄압할 때 내세우던 논리와 결을 달리한다. 윤석열이 ‘적’으로 규정한 대상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다. 과거의 종북몰이를 업그레이드시킨 새로운 형태의 매카시즘이다. 내란 세력은 한국인 정서 전반에 퍼져있는 반중 정서를 정확히 겨냥해 ‘확산 가능성’을 담보한 내란의 논리를 설계한 것이다. 부정선거론은 온갖 가짜뉴스로 재생산되어 마구잡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윤석열 퇴진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중국인이란가, 중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는 식의 괴담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위해할 목적으로 집단을 이뤄 새벽에 법원을 습격, 파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게 된다.

다행히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고 현재 윤석열은 법원에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이지만, 그가 남긴 분열과 극단주의의 씨앗은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주류화되기 어려운 토양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실에서 집단을 이뤄 법원을 파괴하고, 헌법재판소에 테러 위협을 가하며, 위협적인 집회를 반복하는 광경이 시민들에게 준 충격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극단주의 선동에 적극 호응하는 집단이 전통적인 한국의 보수층으로 꼽히는 노인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는 충격은 컸다. 소위 ‘윤어게인’이라 부르는 윤석열 지지집단에서는 2030 세대가 다양한 역할과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위협적인 시위를 하고, 노골적인 혐오표현을 돌림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다니며, 언짢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인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한다. 10대 사이에서는 온라인 공간상의 놀이문화처럼 극우 선동이 퍼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2030 극우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구제불능 세대’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이 지나 2030 세대가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 자연히 사라질 현상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황당한 거짓말에 2030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이유와, 주변 강대국에 대한 혐오 논리가 손쉽게 확산되는 까닭에 대한 분석과 대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4. 분열은 ‘불안’에서 시작된다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사실 두려움에 가깝다. 지리적·역사적 연원과 개인의 다양한 경험 맥락,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우방이란 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교역국임에도 한국인들은 중국의 팽창과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극단주의 선동은 이러한 인식을 교묘하게 파고든다. ‘부정선거’로 중국이 한국을 잠식해나가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인들이 사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 부동산을 사들여 가격을 폭등시키며, 청년 실업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의 불안 요인을 외부인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극우 선동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선동에 2030 세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2030 세대에게 누적된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당하고, 한국의 정치가 이러한 문제에 유효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2년 한국의 수도,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53%였고 2030의 투표율은 30%대였다. 시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고, 청년 10명 중 7명이 서울의 내일을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 서울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이며,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슈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다루어지는 선거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투표하는 보람을 별로 느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고민과 미래를 입에 올리지 않는 후보들에게 바쁜 시간을 쪼개 투표하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이 2030에게 정치에 참여할 보람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들이 해결하고 싶은 불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 특히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단언컨대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자산불평등의 문제다. 매일 성실하게 노동해도 집 한 채를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쥐어주는 박탈감 속에서 노력의 가치는 날마다 평가절하 되고 있다. 대도시 안에서도, 도시와 지방간에도, 세대 간에도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를 노동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 형성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VALID는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보기로 했다. 필자는 2026년, 직접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급변하는 세상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만들어보기로 했고, VALID의 팀 프로젝트로서 뜻이 맞는 팀 멤버들과 함께 만 36세의 나이로 한국의 새로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2025년 11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이 너무 비싸지 않냐’고 묻는 ‘서울너무비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질문을 받는 모두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대답을 내놨다. 사실 너무 당연한 대답이다. 그러면서도 궁금했던 것은 ‘비싸다’는 공통의 감각의 시작점이다.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를 보고 비싸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집값과 점심 메뉴판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비싸?’ 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집이나 밥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꿈이나 취미, 가족, 친구처럼 삶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갈수록 시민들은 집과 밥에 소득의 대부분을 투여하게 되고 있다.

결국 ‘비싸다’의 다른 말은 ‘불안하다’다. 한 사람의 전부가 집과 밥이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사람은 갑자기 아프고, 언젠가 늙는다. 집과 밥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내일이 존재한다.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한없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비싸다는 말은, 너무 불안하다는 말과 같다. ‘김형남 서울시장 선거 캠프’는 이러한 고민을 확장해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에 집중한 슬로건과 메시지, 정책을 제시했다. ‘살 수 있는 서울, 과감한 변화’의 기치 아래 ‘자살률 0%’를 도시의 목표로 제시하고, 주거 안정, 특히 세입자의 주거 안정,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도시의 랜드마크, 화려한 도시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다른 후보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경선에서 낙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 정치가 그간 외면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왔던 사람들의 ‘불안’과 ‘불평등’ 이슈를 정면으로 다뤄낸 흔치 않았던 인상 깊은 선거 캠페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5. 정치, 다가오는 불안에 맞설 ‘단단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

한국에 행운이 있다면 ‘아직 매력적인 극단주의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농담삼아 얘기하곤 한다. 어쩌면 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극단주의가 사람들의 불안을 숙주 삼아 곳곳에서 번져나가고 있다.

불안을 혐오와 배제, 폭력으로 해결하자는 극단주의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불안에 맞서는 민주주의 정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길 뿐이다. AI가 특이점을 넘어서고, 사회 초년생들의 일자리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전연령, 전세대가 고용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치가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단단한 방파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끔찍한 정치적 결론에 닿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작업에 천착해야 한다.

VALID는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세계관을 부지런히 쌓아가며 더 많은 동료들과 한국정치의 세계관을 교체할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선거기간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아직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는발표2

아시아의 선거:
도전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무결성 강화



브리자 로살레스 | ANFREL 사무총장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감시, 선거무결성,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의 지역 전문가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제도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주의 및 법률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의 선거: 도전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무결성 강화

브리자 로살레스 | ANFREL 사무총장

아시아는 선거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복잡한 민주적 선거 과정과 엄격하게 통제된 선거 과정, 혼합 체제, 전환기 체제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선거는 단일한 궤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깊게 뿌리내린 정치적 역사와 제도적 배치, 그리고 진화하는 권력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공통의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이 다양한 체제 전반에서 선거는 종종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개최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의 기제로서의 기능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선거가 치러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거가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포용적이며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유 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시점은 선거의 쇠퇴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내에서 선거가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태국에서 의 최근 관찰 및 평가 임무와 미얀마에 대한 분석 작업,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2024년 총선 및 2025년을 향한 필리핀의 진화하는 선거 지형에 대한 이전의 활동들을 종합해 볼 때,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도 반 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기술적 행정을 넘어선 구조적 압력을 가리키며, 이는 절차적 준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국제 선거 참관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과 같은 국제적 프레임워크는 이 점에서 여전히 필수적이며, 선거가 전체 선거 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 경쟁성, 포용 성 및 책임성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ANFREL의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증진을 위한 모델공약'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를 지역적으로 근거한 벤치마크로 구체화하며, 아시아의 선거 무결성이 규범에 기반하면서도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스리랑카에서 ANFREL의 2024년 의회 선거 관찰은 여러 면에서 기술적으로 잘 관리된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일 절차는 대체로 질서 정연했으며, 도전적인 위기 이후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 기구의 제도적 역량은 온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선거 맥락은 기저의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현직의 지속적인 우위, 불균등한 캠페인 가시성이 정치적 경쟁의 조건을 형성했습니다. ANFREL의 조사 결과에 반영된 바와 같이, 선거의 신뢰성은 행정적인 측면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선거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환경에도 동일하게 좌우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2026년 선거에서는 이러한 역학의 더욱 제약된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카터 센터(The Carter Center)와 협력하여 실시한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과 400개 이상의 투표소에 대한 ANFREL의 관찰 결과, 많은 장소에서 투표의 절차적 측면은 대체로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치적 경쟁, 위축된 시민 공간, 고도로 매개된 정보 지형으로 특징지어지는 더 넓은 환경은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적

준수는 선거의 선택 폭을 좁히는 구조적 한계와 공존했으며, 이는 기술적 벤치마크를 넘어 선거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팔에서 ANFREL의 사전 선거 평가와 사후 관찰은 포용적인 참여와 기능적인 선거 행정이 특징인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자금 투명성, 유권자 정보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국지적인 정치 역학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선거일 당일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네팔의 사례는 비교적 경쟁적인 환경에서도 선거 무결성이 선거가 전개되는 더 넓은 생태계를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절차와 실질 사이의 간극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개방성, 제도적 역량, 시민 공간의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을 따라 존재합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더 큰 규모의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전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루에 치러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인 인도네시아의 2024년 총선에서, 그 규모와 물류적 성공은 민주적 제도의 회복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더 깊은 구조적 우려는 지속되었습니다. 국가 자원과 정치 캠페인 사이의 경계 모호함, 그리고 정치 가문과 공고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경쟁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과제는 행정적 역량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형성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2025년 중간 선거를 거쳐 2028년 선거를 향해 나아가는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은 자동 선거 시스템 사용에 있어 지역적인 선두주자였지만, 투명성, 감사 가능성, 대중의 신뢰와 관련된 이슈들이 선거 담론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캠페인의 급격한 확장과 허위 정보는 선거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전반에서 기술의 역할은 복잡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의 감사 가능성, 결과 전송의 투명성, 무작위 수작업 감사와 같은 안전장치의 적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선거가 대체로 수작업으로 유지되는 태국에서는 투표지 디자인, 해석, 집계 과정의 일관성 등 다른 형태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술 자체가 선거 신뢰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신뢰는 투명성, 명확성, 그리고 선거 과정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정보 환경의 변화입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태국 전반에 걸쳐 ANFREL의 활동은 허위 정보, 조직적인 온라인 행동, 파편화된 정보 생태계가 선거를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선거 과정은 더 이상 제도적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식(perception)이 정당성에 과정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넓은 정보 공간 내에서 전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방법론과 함께 디지털 분석을 통합하여 선거 관찰이 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얀마와 같이 더 제약된 맥락에서 그 함의는 더욱 심오합니다. ANFREL의 분석 작업은 의미 있는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도 정당성을 투사하기 위해 선거 과정이 어떻게 도구화될 수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진화하는 과제에 대응하여, 선거 무결성에 대한 ANFREL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섭니다. 국제 선거 참관단(IEOM)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캠페인과 옹호, 아웃리치 및 소통, 거버넌스와 선거 개혁,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하는 더 넓은 프레임워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모델은 고립된 개입만으로는 선거 무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해를 반영합니다. 대신 선거 주기 전반과 민주주의 생태계의 여러 수준에 걸친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찰 임무는 이 작업의 증거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배치, 표준화된 방법론, 엄격한 분석을 통해 ANFREL은 국가 및 지역 담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평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끝은 아닙니다. 옹호를 통해 ANFREL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권고 사항을 실천 가능한 개혁으로 연결합니다. 아웃리치와 소통 노력은 이러한 통찰력이 더 넓은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대중의 이해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거버넌스 및 선거 개혁 이니셔티브는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며, 현지의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국가적 관행을 국제 표준에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는 국내 행위자들, 특히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선거 무결성을 지켜갈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신뢰 재건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선거 시행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거 과정의 일관성과 무결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것은 행정의 투명성, 경쟁의 공정성, 참여의 포용성, 거버넌스의 책임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반응성, 그리고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ANFREL의 관점에서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은 관찰을 넘어 책임 있는 지원과 조율(stewardship)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즉, 표준과 관행을 연결하고 국가적 경험을 비교 통찰력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는 단순히 선거 과정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 책임 추구, 그리고 일부 맥락에서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긴 여정을 포함한 더 넓은 민주적 궤적 내에 선거 과정을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 과정이 분쟁, 정치적 억압 또는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통치와 교차하는 맥락에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선거의 신뢰성은 정의, 포용성,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더 넓은 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책임 기제가 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 선거는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불만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에 근거할 때, 선거는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고 민주적 규범을 강화하는 진입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점점 더 제약된 조건 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한된 자원, 위축되는 시민 공간, 그리고 국내 정치 환경과 국제적 참여를 모두 형성하는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경쟁적인 글로벌 우선순위, 변화하는 기부 지형, 주권에 대한 민감성은 선거 무결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응력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전략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적 협력을 활용하며, 목표가 분명하고 증거에 기반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비교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려면 선거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개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장 관찰과 원격 모니터링을 결합하고, 전통적인 방법론에 디지털 분석을 통합하며, 선거 과정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더욱 유연하고 맥락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원 제약은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혁신과 더 날카로운 우선순위 설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과제는 단지 선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전 환경부터 선거 후 책임까지 선거 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선거 무결성이 인권, 거버넌스, 법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전적인 정치적 맥락에서도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관리 기구, 시민사회, 정책 입안자 및 지역 네트워크 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시아 전반에서 선거는 종종 대규모로,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며 계속해서 치러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기회와 제약이 공존하는 시대에 선거가 대의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계속 기능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이해관계자들이 구조적 과제에 맞서고, 의미 있는 개혁을 추구하며, 제한된 자원과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지정학적 지형이라는 실질적인 현실을 헤쳐 나가면서 민주적 원칙에 대한 공유된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발표1

청년 시위에서 대중 시위로 : 세대적 각성



살레 우딘 시파트 | 방글라데시 국민시민당 공동사무부총장

살레 우딘 시파트는 정치활동가이자 인권옹호가이다. 그는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10년간 지속된 권위주의 정권 퇴진을 이끈 청년 주도 민주화운동의 핵심 조직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새롭게 결성된 청년 주도 국민시민당(NCP)의 공보비서로 활동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청년 시위에서 대중 시위로 : 세대적 각성

살레 우딘 시파트 | 방글라데시 국민시민당 공동사무부총장

피로 쓴 편지

| “어머니, 저는 시위에 참여하러 갑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해주세요.”

무엇이 10학년 학생으로 하여금 2024년 8월 5일 거리로 나서기 전 이런 마지막 편지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이미 한 세대는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산탄총에 맞은 아부 사이드(Abu Sayeed), 발코니에서 총에 맞은 여학생 나이마 술타나(Naima Sultana), 그리고 총성 속에 쓰러져가는 10대들. 이것은 먼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낸 현실이었습니다. 이 봉기는 시민들을 향한 국가 폭력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정당 구조에서 벗어난 한 세대가 총동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반부가가치세(Anti-VAT) 운동: 첫 번째 정치적 조우로서의 불평등

청년들의 각성은 2024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반부가가치세 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폭로했습니다. 다카에서 집세, 식비, 교통비,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축출된 아와미 연맹의 학생 조직인 ‘차트로 리그(Chatro League)’의 거둬들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조직된 저항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조기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쿼터제 개혁 운동: 종말의 시작

이러한 의식은 2018년 쿼터제 개혁 운동 기간 동안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시의 공무원 채용 정책 하에서는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자리의 무려 56%가 다양한 쿼터로 할당되어 있었으며, 그 중 30%는 1971년 독립 유공자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독점적으로 예약되어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위는 체포와 낙인찍기라는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학생들은 ‘극단주의자’나 ‘반국가 세력’으로 몰렸고, 이는 이견과 저항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당성을 박탈당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로 안전 운동: 진행 중인 국가 개혁

같은 해, 도로 안전 운동은 행정의 실패와 국가의 구조적 폭력을 폭로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교통 정리를 수행하며 국가의 책임 부재와 청년들이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적 통제를 과시하듯 경찰과 차트로 리그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집단적으로 한 세대의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즉,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의라는 점이었습니다.

고문 반대 운동: 마지막 정치적 공간의 통제를 깨뜨리다

대학교는 통제의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실이 거부되었고, 기본적인 시설이 옹은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게스트룸 문화(Guestroom Culture)’는 신입생들에 대한 고문과 협박을 제도화했습니다.

2019년 아브라르 파하드(Abrar Fahad)의 살해 사건은 이 시스템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환점이 되어 책임 규명에 대한 요구를 촉발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광범위한 고문에 대응하여, 우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문에 반대하는 학생들(SAT)’을 설립했습니다.

기록 그 자체가 학대와 책임 회피가 공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로 몰렸고, 활동가들은 공격받았으며, 기관들은 공범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독재적 통제가 국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제도적 삶 속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더 넓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국경 살해 중단” 운동: 청년, 주권 그리고 인권

청년 활동은 주권과 인권의 문제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국경 살해 중단” 운동은 인도 접경 지역에서 인도 국경수비대(BSF)에 의해 반복되는 방글라데시 민간인 살해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펜스에 매달린 펠라니 카툰(Felani Khatun)의 시신 사진은 비인도성과 중대한 인권 침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영향력과 독재적 통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시위는 국내의 탄압을 외부 정치와 연결했습니다. 청년들은 독재를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더 넓은 권력 시스템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탄압: 실종, 살해 그리고 공포

15년 동안 탄압의 패턴은 심화되었습니다.

- 강제 실종: “아이나고르(Aynaghor, 거울의 집)”로 악명 높게 알려진 비밀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실종. 봉기 이후 조사 위원회는 최소 14개 구금 시설에서 1,569건의 확인된 강제 실종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 법외 처형: “교전(crossfire)”으로 명명된 처형. 셰이크 하시나 정권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교전’이나 ‘총격전’을 가장하여 2,600명 이상의 법외 처형을 감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니-캐핑(Knee-capping):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반대 인사들을 영구적으로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에 총을 쏘는 행위.

아딜루르 라흐만 칸(Adilur Rahman Khan)과 ASM 나시루딘 엘란(ASM Nasiruddin Elan) 같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화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활동가, 기자들은 저항하며 슬픔을 집단적 행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시에, ‘개발’이라는 서사는 구조적 부패와 불평등, 경제적 배제를 은폐했습니다.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금융 착취와 치솟는 청년 실업률과 공존했습니다.

문순 혁명: 시위에서 봉기로

2024년,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쿼터제의 부활은 ‘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라는 더 넓은 기치 아래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사안에서 구조적 불의로 확장된 정치적 의식을 반영했습니다. 7월 16일 아부 사이드의 죽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노를 전국적 저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전국적인 시위
-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한 블록 단위 급습 수색(Block raids)
- 실탄, 살상 무기 사용 및 준군사 조직, 장갑차, 헬리콥터 배치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학생들과 연대하여 합류했습니다. 운동은 대중 봉기로 진화했습니다. 체포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조정자들은 다시 결집했습니다. 8월 3일, 셰이크 하시나의 사퇴뿐만 아니라 독재 구조 자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단일 요구안이 선포되었습니다.

8월 5일: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

8월 5일,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나섰습니다. 다카의 거리는 집단적인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된 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셰이크 하시나와 아와미 연맹 지도자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즉각적인 축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믿기지 않음, 안도, 그리고 소음 속의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부둥켜안았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적인 무언가로 녹아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귀환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수년간의 공포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슬픔을 동반했습니다.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30,000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봉기 이후: 정의, 개혁, 책임

봉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세 가지 핵심 요구를 가진 뚜렷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 정의: 과거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
- 제도적 개혁: 헌법부터 경찰, 사법부, 선거 제도 등에 이르는 전방위적 개혁.
- 책임: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확립을 포함하되, 선거를 통한 변화에 그치지 않는 책임성 확보

그들은 선거만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깊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들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이니셔티브, 정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적 전환

“문순 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 그 이상을 의미하며, 세대적 각성을 신호했습니다. 이 세대는 과거에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정치의식을 갖추고 있고,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지배 형태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청년들은 이제 민주화, 인권 옹호, 제도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청년 주도 운동이 거버넌스와 책임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역의 더 넓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결론

흘어져 있던 시위가 대중 봉기로 변모한 과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불평등, 억압, 그리고 저항 위에 세워졌습니다. 정권의 몰락은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정의, 개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봉기는 하나의 균열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뒤따르느냐가 이 봉기가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필자는 다카에 기반을 둔 방글라데시 국가시민당의 공동 위원회 비서입니다. 연락처: salehsifat@proton.me)

발표2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



조 용 기 | 인도네시아대학교 철학과 재학생, 거리 응급활동가

풀뿌리 조직화, 시위 안전, 디지털 옹호 활동의 교차 지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철학을 전공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운동 지원, 시민사회 이슈 기록,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

조 용 기 | 인도네시아대학교 철학과 재학생, 거리 응급활동가

2024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포퓰리즘적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공약을 앞세워 선거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긴장과 제도적 긴박함이 고조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25년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권력이 행사되고 경합하는 방식에 있어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2월, ‘#IndonesiaGelap’(어두운 인도네시아라는 의미) 해시태그 시위를 통해 대중의 불만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동원의 물결이 학생회나 NGO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 행동이 과거보다 덜 중앙집중적이고, 더 자발적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현상은 기성 시민사회, 전통적 매개체, 그리고 공식적인 정치 채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이 시위들은 MBG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청년,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사이에서 이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헌법상 국가 예산의 20%가 교육에 할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할당량의 일부가 대통령의 MBG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 시설의 최적화와 교사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 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특정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선 지지자들에 대한 사후 보답이나 정치적 ‘보은’과 같은 정치적·재정적 동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우려들이 결국 ‘Indonesia Gelap’ 시위라는 대규모 동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군사법 개정으로 인해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항은 ‘Piknik Melawan’(저항 소풍)과 같은 창의적인 형태를 채택하여, 색채감 있고 비폭력 직접행동(NVDA) 방식의 점거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공공 공간을 되찾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핵심적인 쟁점은 1998년 수하르토(Soeharto) 정권 이전 시대와 유사한 ‘이중 기능(Dual-function)’ 문제의 재부상입니다. 이는 현역 군인이 민간 행정 구조 내에서 확장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군의 강력한 ‘그림자 통치’**가 형성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확장은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이는 시민 공간을 좁히고 시민 생활 내 군국주의의 역할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군인이 저지른 위반 행위가 군사 법원에서 처리될 경우, 제도적 연대감(esprit de corps)이 범죄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료 부대원을 보호할 수 있어 책임 규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특히 대중이 개별 군인의 행동보다는 군 조직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요한 논란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노동절(May Day)을 기점으로 범죄화 양상이 변하면서 전환점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구금된 이들을 하룻밤 동안 조사한 뒤 석방하던 이전의 시위 주기와 달리,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노동절 체포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억지 범죄화가 시도된 징후가 있었으며, 시위대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있던 현장 구급활동가(paramedics)와 법률 지원 활동가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이 단순히 공공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를 넘어, 법적 도구가 더 강압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패턴을 시사합니다. 체포는 단순히 일시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시위 참여 자체를 범죄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으며, 이는 나중에 더 광범위한 체제적 억압으로 확대될 패턴의 초기 징후였습니다.

2025년 8월, 누적된 대중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기폭제 중 하나는 파티(Pati)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및 건물세(PBB)의 대폭 인상에 대한 지역적 저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인상은 MBG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예산 효율화 조치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이 감소한 결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지방 정부는 대안적인 수입원을 찾아 나섰고,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적 저항을 넘어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Affan Kurniawan)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격화시키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1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정점을 지난 2025년 9월 이후부터는 억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학생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포함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청년 활동가들을 겨냥한 ‘마녀사냥’ 패턴이 널리 보고되었습니다. 대규모 체포가 발생했으며, 일관성 없는 법적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8월 시위 도중 약탈과 방화를 선동하는 등 불안을 조성하거나 확대하는 데 정보기관 관계자, 현장 공작원,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조치는 이러한 고위급 행위자들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은 적극적으로 범죄화하는 ‘부작위(omission)’의 패턴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히 청년층에 대한 자의적인 억압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공포를 조성하고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억압은 결국 더 이상 순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콘트라에스(KontraS)의 안드리 유누스(Andrie Yunus)를 겨냥한 염산 공격을 통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상황은 또 다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전략정보국(BAIS) 요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BAIS 자체의 인정과 공식 경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감시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군 사법 체계에 도전하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 옹호 활동을 해왔으며, 8월 시위에 대한 사실조사위원회(Komisi Pencari Fakta)에 참여했고, 2025년 3월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군사법 관련 비공개 입법 논의를 폭로하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공격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책임과 시민 참여라는 더 넓은 원칙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구가 직접 개입하고 국가와 연결된 자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핵심 요소를 충족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천하려는 개인이 직면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후 세력 규명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사건 발생 수 주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을 지님에도 민간 법원에서 처리될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척 부재는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은 국가의 부작위, 즉 조치해야 할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는 책임 회피의 한 형태를 반영합니다. 사건에 대한 개입이 확인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위험이 있으며, 시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행동의 부재 자체가 곧 인권 침해가 되는 국가 책임의 광범위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한 가지 중대한 격차는 운동 인프라의 구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 역량뿐만 아니라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공동체적 돌봄(collective care)'의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연결을 강화할 잠재력이 여전히 큼니다. 지식, 역사적 기억, 전략적 경험은 시간이 지나며 파편화되거나 소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재는 종종 운동 주체들이 분석을 반복해서 재구성하고, 권력 관계를 다시 그려내고, 시행착오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운동 내부에서 공동체적 돌봄의 모범적 실천을 찾는 것입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많은 도시 맥락에서 활동주의는 시위 그 자체, 즉 동원의 순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시위 이전과 이후의 단계에는 훨씬 적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 운동 주체들은 8월 시위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마녀사냥'과 같은 지속적인 억압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지원, 안전 메커니즘, 심리적 돌봄의 부족은 활동가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앞으로 공동체적 돌봄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항의 핵심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운동이 동원의 정점을 넘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영역은 무시할 수 없는 기회와 취약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정치적 인식을 높이고,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개인들을 공론장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시성, 참여, 그리고 파급력(virality)은 더 넓은 동원을 위한 중요한 진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성공을 단순히 '좋아요', 공유수, 온라인 가시성과 같은 디지털 지표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디지털 활동주의를 현장의 참여와 연결하여, 온라인 참여가 실질적인 위험이 따르는 오프라인 공론장에서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다시 인프라의 문제, 특히 조정, 소통, 지식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없이는 디지털과 물리적 영역 사이의 격차가 구조적 약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공간 자체도 점점 더 치열한 경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독싱(doxxing), 감시, 해킹에서부터 표적화된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종종 개인 데이터와 기술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공권력 또는 정부 대리 행위자들이 개입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더 강력한 디지털 보안 교육, 명확한 지원 체계, 그리고 위험 완화에 대한 접근 가능한 지식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프라 강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의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시민 참여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발표3

멕시코 청년의 현실과 연대의 주거 운동 : 함께 삶을 짓기로 결정한 청년들



연정화 |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볼리비아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연구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볼리비아 봉사단원과 페루 봉사단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멕시코 케레타로 세종학당 파견교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멕시코 주거정치와 도시 주거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배제와 저항, 그리고 대안적 공동체 실천이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멕시코 청년의 현실과 연대의 주거 운동 : 함께 삶을 짓기로 결정한 청년들

연 정 화 |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생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간(회사, 영화관, 공원 등) 폐쇄,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관계의 물질적 공간 범위를 축소거나 제한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노동의 탈공간화를 가속시켰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망의 확대는 노동을 물질적 공간에서 비물질적,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시켰으며, 원격 업무 방식이라는 노동 형태 변화는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초연결 사회로 빠르게 이동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공식 선포하면서 코로나19는 국경 내에서 관리 가능한 호흡기 증후군이 되었지만,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¹⁾는 국경을 넘어 더욱 확장되었다. 태국 치앙마이, 인도네시아 발리, 포르투갈 리스본 등 본국의 물가보다 저렴하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만족도가 높은 세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노마드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멕시코시티도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의 도착지 중 한 곳이다. 특히 국경을 맞닿고 있는 미국인들의 유입이 높았다. 사실 미국에서 받는 임금을 멕시코에서 여유롭게 쓰면서 살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등장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982년에 터진 멕시코의 외채위기는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졌으며 금융지원의 선제 조건으로 WB와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멕시코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미국과의 악연은 심화된다.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 시장의 완전한 개방,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친기업적 제도 개혁, 노동 유연화, 국경지역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²⁾ 확대를 통한 세계의 공장 전략과 정부의 최소 개입 기조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유 경쟁의 가치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친기업적, 친미국적 정부 정책은 1994년 1월 1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자본, 투자자본이 폭발적으로 멕시코에 유입되게 된다. 미국 자본을 통한 멕시코의 수출지향 제조업 발전전략은 멕시코와 미국과의 경제적 종속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미국인 투자자, 노동자, 여행자의 멕시코 방문을 넘어 거주와 정주의 공간으로 탈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인력의 이동과 노동의 유연화 속에서 정부의 최소개입 정책 유지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보건,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이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발전을 인식하는 핵심 가치로 전환됐다. 이 중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간

1)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란 디지털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등)를 활용해 회사나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원격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 원격근무 직장인 등이 주를 이룬다.
2) 마킬라도라(Maquiladora)란 보세 임가공 산업을 일컬으며, NAFTA이후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원료와 부품 등의 무관세 수입 이점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자동차부품, 기계류, 전자기기등을 조립·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멕시코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 정책이다.

삶의 시작과 맺음의 공간인 주거에 대해서도 토지정의나 사용가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가 아닌 소득을 위한 자본 가치로, 이익 수단의 교환 가치로 전환되었다. 능력 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구입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되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수많은 비공식 노동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판자촌으로, 불법자조주택으로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도 주거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사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았던 1917년에 제정된 멕시코 헌법이 세계 최초로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헌법 제4조는“모든 사람은 자신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적절한 생태계(주거 환경 포함)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멕시코 국민은 “존엄하고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헌법에 담고 있지만 실상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죽은 권리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과 부동산 카르텔, 디지털 노마드 외국인이 야기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불행하게도 악의 축을 구성하며 도시 주거 문제를 철저히 개인 문제로 환원시켰으며 멕시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적절한 주거의 접근할 수 있는 사회권을 빼앗았다.

부동산 카르텔이 주도하는 도시의 상품화가, 멕시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던. 디지털 노마드, 한 달 살기 여행자, 장기 여행자 등의 외국인들이 만나면서 1) 임대료 인상과 원주민의 쫓김과 내몰림, 2) 멕시코시티 내 공간 분리 가속화라는 심각한 도시 주거문제를 야기했다. 물론 멕시코시티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의 유입과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 때문만은 아니다. 공공의 도시개발과 편파적 주거 정책 및 관리 소홀, 제도권에서 벗어난 임대 방식과 그에 대한 규제 부재, 불안한 치안과 위험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하면서 구제불능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주요 관광지에서부터 주거지역까지 숙박시설, 공유오피스, 쇼핑몰 건설 등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Airbnb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 방식들이 도입되면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외국인 투자보호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강제 퇴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멕시코시티 도시 공간을 불평등하게 재배치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악질적으로 변질 된 것이다. 결국 멕시코시티에서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집의 있고 없음의 주택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권리로서 도시권과 주거권에 대한 요구와 사회권의 회복인 것이다.

도시 주거문제에 대한 멕시코 대중의 저항의 역사는 도시빈민을 필두로 급진적으로 조직된 1970년대의 도시대중운동(Movimiento Urbano Popular)이 좌파 정당과 학생운동과 결합되면서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사회운동대로 성장하면서 발전했다. 토지 소유권 인정과 주택 권리 보장 및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교통 등) 제공을 요구하며 국가와 협상을 이끌고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 정비를 주장하던 도시대중운동은 1985년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도시 외곽이 파괴되고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진 복구와 도시 재생에 무능력한 정부를 목도하며 폭발하게 된다.

보편적 주거권 보장에서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와 주택 재건에 집중되면서 이재민과 봉제 노동자, 도시 빈민들을 중심으로 주거투쟁전선이 재편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운동조직인 '이재민 통합조정위원회(Coordinadora Unica de Damnificados)'는 정부의 도시 재건 계획 수립에 이재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 제공을 요구하였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사회적 소요소태로 인한 치안 문제와 정부 지지도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당시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정부는 '이재민 통합조정위원회(CUD)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도시 주거 투쟁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운동 지도부 일부가 행정 협상 상황에서 정부에 포섭되거나, NGO나 정당으로 진출하면서 급진적 도시권, 주거권에 대한 집단행동이 협상과 프로젝트 기반의 정치로 전환되어 제도 속으로 흡수되거나 분파되면서 파벌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남겨진 급진적 반정부 주거권 운동 세력 역시 내부 분열이 진행되면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 쓰나미 속에서 와해되었다. 공공주택 축소와 민간 주택 건설 확대 및 주택 금융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부동산 시장은 주거를 개인의 신용과 소득 문제로 전환시켰다. 이는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닌 각자 해결해야 할 개인의 능력과 책임의 문제가 된 것이다. 대규모의 조직대오로서의 도시대중운동은 사라졌다.

세계 10위의 인구 대국인 멕시코의 국민 약 1억 3천만 명(2025년)이다. 이중 0세~45세까지의 인구가 약 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인구의 3/4이 45세 이하인 '젊은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15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약 6천 1백만 명 정도이니 의무교육과정(고등학교)을 마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멕시코의 경제 활동 참여 인구 6천 1백만 명 중 54.8%의 노동자는 비공식 시장에서 근무하며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혜택뿐 아니라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자조 주택 건설 지원금 등은 공식 노동 시장에서 회사의 보증이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재난 피해 당사자, 보호구역 원주민 등 일시적이고 시혜적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시간당 약 25~40페소(환율 1MX\$=80원, 한화 약 2,000원~3,200원)를 받는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시간 당 40페소를 버는 비공식 노동자가 매일 8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9,600페소(한화 768,000원)이다. 멕시코시티의 평균 월세가 약 2만 페소(한화 1,600,000원)임을 생각하면 비공식 노동자들은 멕시코시티 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멕시코시티의 가장 외곽에 치안이 불안하고, 도로 상황이 열악하며,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수도와 하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가 미비하며, 교육시설과 보건 위생 시설이 부족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정치, 경제 엘리트들과 부동산 카르텔은 청년층의 학구열 부족과 노력하지 않음, 적금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충실한 생활 습관 때문에 비공식노동시장에 머물고, 집을 갖지 못한다고 청년들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의 50%이상을 빈민의 상태로, 불평등의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자신들에게 돌아옴을 알고 있는 그들의 천박한 주장일 뿐이다.

2020년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에서 진행한 전국 주택 총 조사(ENVI)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의 어려움으로 자가 소유보다 주택 임대 시장을 통해 주거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청년들의 주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핵심 문제이다.

임대료 인상에 따른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쫓겨나는 청년들을 비물리적 공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를 외친다. 비공식 노동자로 주거 이동이 잦고, 활동 범위의 변화가 큰 청년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투쟁의 전선에 뛰어드는 것의 한계를 좌절의 이유로 두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간다.

청년주거전선(Frente por la Vivienda Joven)

멕시코시티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비공식 노동자, 모든 배제된 자들의 피난처이자 대항을 위한 조직적 힘을 기르고 있는 청년 주거 전선은 2025년 4월에 결성됐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멕시코시티정부는 국제적 행사에 있어서 치안과 미화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공식 주거지역(colonias populares) 단속을 강화했고 부동산 카르텔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시내 중심부 지역의 건물을 구입한 후 숙박 시설(호텔, 호스텔, Airbnb 등)로 전환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노마드의 유입, 월드컵을 앞두고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cification)³⁾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빠르게 이스타팔라파(Iztapalapa)나 틀라우악(Tláhuac), 따쿠바야(Tacubaya)와 같은, 1985년 지진 이후 여전히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낙후되고 범죄율이 높은 외곽으로 밀려나가게 됐다. 이에 청년들은 주거권 실현과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청년 조직을 탄생시켰다.

2025년 7월 4일 첫 Anti-젠트리피케이션 대중 집회를 조직하고 멕시코시티 시장 끌라라 브루가다(Clara Brugada)의 도시 계획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멕시코시티에서 좌파정부가 출범한 이후 폭력을 동반한 청년들의 조직된 시위는 큰 방향을 일으켰으며, 브루가다 시장은 7월 16일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조항의 법안'을 멕시코시티 의회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청년들과의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임기응변일 뿐이었다.

2025년 8월 27일 새벽 6시 30분,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예술궁전(Palacio de Bellas Artes) 근처의 '쿠바공화국 길 11번지(la calle República de Cuba #11)'에 위치한 상가주택으로 시민안전부(SSC) 소속 경찰관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쳤다.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이유로 19개 호실과 2개의 상가 점포에 있던 10가구 가족들을 거리로 쫓아내고 가구와 가전제품 및 집기와 생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버리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했다. 당일 이 소식을 듣고 가장

3)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on)은 관광지화를 뜻하는 투어리스티파이(touristfy)와 지역 개발에 따라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공간이 관광지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주거지의 관광지화는 소음, 쓰레기,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고, 기존의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고, 그 자리에 카페나 기념품 점 등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한다.

빠르게 청년주거전선(FVJ) 멤버들이 모였다. 대규모 대중 시위와 정부 압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지지의 연대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고, '쿠바11 캠페인'을 시작했다.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각오로 거리를 점거한 사람들을 위해 SNS(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물품, 의료, 식음료 등 구호품을 요청했고, 위협 상황에 대비해 경호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법적 싸움을 위한 변호사와 보건 위생을 위한 의료 인력의 연대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쟁의 과정을 전하고, 연대를 조직했다.

청년주거전선(FVJ)은 조직 노동자와 같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급진적이고 강력한 대규모 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상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멕시코시티에서 자행되고 있는 소규모 강제 퇴거 현장에 달려가 그들과 연대하고 일상 공유한다. 강제 퇴거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SNS에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봉사자를 모집한다.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거나 전단지를 부착하고, 정치인의 SNS에 댓글을 달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행동을 촉구한다.

청년들은 '주거는 상품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각자 도생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 'No'라고 외치며, 규모나 참여자 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연결되고 삶을 공유하며 함께 연대의 집을 짓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권 투쟁은 강력한 힘으로 뭉쳐지고 있다.

멕시코의 청년들은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주거 불평등과 도시 공간 분리 문제를 해결 가능한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이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화되는 자본 가치가 아닌 인간이라면 누려야 하는 절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들이 모이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발표4

저항과 생존 사이 : 쿠데타 이후 미얀마 청년들의 삶과 고민

김 소 연 | 미얀마 유학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양곤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수학했으며, 2021년 10월 5일 쿠데타 이후 한국에 입국하였다. 광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5·18기념재단에서 약 2년 6개월간 국제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인도적 체류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항과 생존 사이 : 쿠데타 이후 미얀마 청년들의 삶과 고민

김 소 연 | 미얀마 유학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 들어가며
학생과 청년 세대는 역사적으로 노동·반전·독립·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이다(TeixieriaCamila, 2024). 이러한 특징은 미얀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얀마의 청년들은 1948년 전 독립운동부터 이후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이어왔으며, 미얀마의 독립 영웅으로 현재까지도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 역시 청년 세대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1962년 네윈(Ne Win)의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며 학생과 청년을 강하게 억압해 왔다(Wire and Hein Htet Kyaw 2026). 특히 1962년 7월 7일 양곤대학교 학생 시위는 군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학생회관이 폭파되는 등, 이후 반복되는 청년 탄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8888 혁명’으로 불리는 1988년의 민주화운동과 2007년의 사프란 혁명, 그리고 2021년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봄혁명(Spring Revolution)에 이르는 혁명적 활동에 청년들은 앞장서 왔고, 군부는 그런 청년들을 주요 통제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억압적 환경 속에서도 미얀마 청년들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직후부터 거리로 나와 저항에 나섰다. 기성세대는 군사정권 시기의 삼엄했던 기억을 떨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청년들을 만류하였으나, 청년들은 2020년 총선 결과가 부정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평화적 시위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빠르게 폭력적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다수의 청년들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저항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을 동반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저항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저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쿠데타를 직접 경험한 또래 청년 8명, 즉 해외 유학 중인 윈툽, 윈텟, 윈민, 윈빠잉, 윈와와 국내에서 생활하는 린력, 린텟, 그리고 최근 해외로 유학을 떠난 린뚜¹⁾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0년에 총선이 치러졌을 당시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이 군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선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쿠데타 이후 이들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인터넷 차단과 정보 통제로 인해 혼란 속에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일부는 소문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부분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체포, 검문,

1) 이 글에 적힌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름에는 모두 ‘윈’으로, 미얀마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름은 모두 ‘린’으로 시작하게 작명하였다. ‘린뚜’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예외인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린’을 붙였다.

감시 등의 위험 속에서 활동이 제한되었고 일부는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계 문제가 중요해지자, 이들은 대학 복학을 포기하거나 취업, 해외 유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본 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쿠데타 이후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미얀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변화된 인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저항과 생존 사이에서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위협받는 삶
봄혁명이 시작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미얀마 내부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2021년 이후 물가 상승과 글로벌 가격 충격의 영향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하였고(Lesego 2026), 2024년 기준 약 20~30%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지속되는 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Phyu Latt Hsu 2026). 쿠데타 이전에는 약 30만 샯 수준의 월 소득으로도 한 가정의 생계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100만 샯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정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악화는 청년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린력, 린텟, 린뚜와 같은 청년들은 대학을 중단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한된 소득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를 철저히 줄이며 생활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청년들이 받는 경제적 압박은 상당하다. 미얀마 현지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린텟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쿠데타 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월 30~40만 샯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가족에게 생활비까지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과거에는 가능했던 기본적인 소비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사만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쿠데타 전과 다른없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청년들이 직면하게 된 곤경은 경제 위기에 따른 생계 위협만이 아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2024년 2월 10일,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성과 18세부터 27세까지의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병역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을 부활시켰다.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그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 법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징병법으로,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의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군부에 맞서 무장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에 징집된 신병들은 사실상 인간 방패로 세워질 가능성이 컸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 누구보다 군부에 맞서 저항해 온 청년들로서는 군을 위해 복무하는 일 자체가 끔찍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이 법이 시행되자 강제 징집에 대한 불안으로 미얀마에서 탈출하려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Maria 2026). 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는 이미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미얀마 청년들이 급증했고, 미얀마에서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징병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징집에 응하는 청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작위 추첨이나 강제 연행, 심지어 납치에 가까운 방식으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린력의 진술에 따르면, 양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월 상납금을 지불하거나, 납치 이후 금전을 요구받고 석방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금액은 약 100만 샌에서 1,000만 샌에 이르며, 일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린두의 사례에서도 징병제가 금전적 착취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가족 중 한 사람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피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마을 단위에서 징집 실무를 맡은 이들이나 군 관계자가 징집 면제를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실제 징집 여부와 무관하게 명단을 갈취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강제로 끌려간 이후 귀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아가 징병제는 납치 및 인신매매 문제와 결합되며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린두와 린렛의 진술에 따르면, 납치된 청년들은 군대뿐 아니라 온라인 사기 조직이나 성매매 조직으로 넘겨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양곤 지역에서는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린렛 역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징병제와 관련된 납치, 금전 요구, 해외 도피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현재 미얀마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청년들이 본 봄혁명의 한계와 과제

봄혁명 이후 약 5년이 지나면서 저항의 동력은 얼마간 약화된 측면도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주체였던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시민들은 군부 정권의 법과 제도를 안전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시된 총선은 군부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제한적 선거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민아웅홀라잉은 2026년 4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정권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정부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의 저항과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내가 인터뷰한 여덟 명의 청년이 쿠데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저항에 대해 가진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로감이 쌓인 상태이긴 했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미얀마가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항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부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현재 미얀마의 저항은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톈은 징병제 시행 이후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 이주를 모색하며 비자를 기다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저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국가 통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하나, 청년들은 군부와 NUG 모두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개인의 안전과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군부의 통제 아래에서 규칙을 따르거나, 여기서 벗어나자면 미얀마를 떠나 노동자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쪽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군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미얀마에서 탈출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저항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민 또한 장기화된 쿠데타 상황 속에서 군부 통치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체제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미얀마의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저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한편, 원빠잉과 원렛의 진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심리적 제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원빠잉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군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교육받은 인재들이 군부 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과 민주화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가 기존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한, 특히 2008년 헌법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제시한다. 원렛 역시 체포 경험을 바탕으로, 저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을 언급하며, 생존이 보장되는 한에서의 제한적 참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군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NUG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저항의 중심점이라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항 운동의 책임을 NUG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은 이상적 저항과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며, 점차 체제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삶의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빠잉의 인터뷰는 장기화된 위기 속에서 저항의 지속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단과 쿠데타, 그리고 이어진 시위 경험을 거쳐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쿠데타 전후 몇 년 동안 경험한 삶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군부의 권력 유지와 민아웅홀라잉의 권력 재편은 이미 예견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군 세력인 NUG 역시 초기와 달리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징병제 시행 이후 청년들이 해외 이주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체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매월 상납금을 지불하는 사례는 개인들이 저항과 순응 사이에서 복합적인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원빠잉은 무장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히려 교육과 지식 전파와 같은 비폭력적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빠잉의 이야기는 현재 미얀마 사회에서 저항이 단순한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선택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원와, 린력, 린렛의 인터뷰는 현재 미얀마의 저항은 장기화된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개인들은 이상적 저항과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 복합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임을 말해 준다. 원와는 본래 무장투쟁과 전쟁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기부터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였고, 현실적으로 무장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적 해결 가능성 역시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린력의 경우, 현재 국민들이 제도권 정치 주체인 NUG보다는 실제로 무장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 집단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화된 저항 속에서 NUG의 정당성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부 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미얀마 국민이 외견상으로는 군사정권이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따르지만, 이를 체제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린렛의 진술은 저항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참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생존의 문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현실적으로 직접 저항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혁명의 희생자들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라고 토로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동시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미얀마의 시민 다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저항의 약화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쿠데타 초기에 미얀마 시민들은 세금 납부나 국가 행사 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의 소극적 저항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억압과 통제로 인해 점차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제도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체제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적응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청년들은 현재 저항을 전면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안전과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체제에 일정 부분 순응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저항 의식을 유지하는 복합적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린뚜의 진술은 저항 내부의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그는 실제로 저항에 참여하며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는 반면, 저항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부 집단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NUG 역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저항에 참여하는 이들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까지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한 집단은 청년들이며, 만약 저항이 성공한다면 그 성과 역시 청년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4. 나가며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미얀마 청년들은 저항과 생존 사이에서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나 역시 미얀마 청년으로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쿠데타 이후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오게 된 입장에서, 이 저항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상황 속에서 점차 지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 지금의 미얀마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이 사실상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일정 부분 체제에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나 여권 갱신과 같은 행정 절차를 위해 군부 정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며, 이는 내면적으로는 체제를 거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국내에 있는 청년들은 체포, 고문, 전쟁 등 훨씬 더 직접적인 위험 속에 놓여 있어 그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글은 저항의 형태가 반드시 거리 시위나 직접적인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금 활동, 군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항을 이어가는 것 역시도 저항이다. 이는 저항이 단순한 행동을 넘어 개인의 태도와 인식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군부는 이러한 저항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큰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체제에 맞추어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현재로서는 군사정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보인다.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군부가 저지른 일들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미얀마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생존과 기억,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Lesego. (2026, March 28). Myanmar faces renewed food crisis amid global price shocks. Retrieved from Channel Africa: <https://www.channelafrica.co.za/channelafrica/news/myanmar-faces-renewed-food-crisis-amid-global-price-shocks/>
- Wire, Mises and Hein Htet Kyaw. (2026, February 20). The Origins of Myanmar’s Coup Culture and Military Dictatorship. Retrieved from Mises Institute: <https://mises.org/mises-wire/origins-myanmars-coup-culture-and-military-dictatorship>
- United Nations. (2024, February 21). Myanmar: Mandatory conscription shows junta’s ‘desperation’, rights experts say. Retrieved from United Nations: <https://news.un.org/en/story/2024/02/1146802#:~:text=filling%20the%20ranks,Coup%20%20conflict%20and%20casualties>
- Hsu Latt Phyu. (2026, March 20). Inflation, Poverty, And Household Economic Resilience In Myanmar – Analysis. Retrieved from Eurasia Review: <https://www.eurasiareview.com/20032026-inflation-poverty-and-household-economic-resilience-in-myanmar-analysis/>
- Teixeira, Camila. (2024). Youth, Protests and the Polycrisis. Florence: unicef for every child.
- Zaccaro, Maria. (2024, February 11).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enforces conscription law. Retrieved from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68261709>

[인터뷰 정보]

- 린력. 2026년 4월 11일, 화상 인터뷰.
- 린텃. 2026년 4월 11일, 화상 인터뷰.
- 원와. 2026년 4월 11일, 화상 인터뷰.
- 린뚜. 2026년 4월 10일, 화상 인터뷰.
- 원툏. 2026년 4월 10일, 화상 인터뷰.
- 원텃. 2026년 4월 10일, 화상 인터뷰.
- 원민. 2026년 4월 10일, 화상 인터뷰.
- 원빠잉. 2026년 4월 10일, 화상 인터뷰.



발표5

세계적 흐름 속
태국 시민사회의 방향



시라푼 품퐁푼 | 전 정치수, Ratsadon 2020 Movement 소속

태국의 전 학생운동 지도자이다. 그는 과거 불경죄(왕실모독죄)로 정치수감자로서 2년간 수감되었으며, 현재는 수감자 권리, 교정 정의,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 속 태국 시민사회의 방향

시라폼 품퐁퐁 | 전 정치수, Ratsadon 2020 Movement 소속

미국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 예로는 국제협력기구·협약·조약에서의 탈퇴¹⁾, 경제 정책 시행,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주권 침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태국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실제로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 특히 서구의 영향력은 태국의 시민사회에 변함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필자는 2020년 라차돈(Ratsadon) 운동에 의한 거리 시위가 종식된 이후 고도로 변화된 태국의 정치 상황과, 2026년 태국의 정치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킨 선거 결과에 대해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회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필자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본 문서는 태국 국가와 시민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2023년 총선 이후부터 2026년 총선 이후까지의 기간을 아우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 글로벌 강대국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 2. 2023년 및 2026년 선거 이후의 태국 정치 상황, 3. 태국의 시민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강대국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태국 정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태국에 부과한 36%의 수입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2025년 기준, 태국은 미국에 72,506.39백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1,144.98백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²⁾

바로 이 지점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협상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은 관세를 이용해 분쟁 종식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불응할 경우 태국과의 무역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장비 비밀 예산 구매와 군대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태국은 미국에 세금 면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인권·인도지원 관련 예산의 심각한 삭감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HIV 환자 지원 단체, 태국 국경으로 피난 온 미얀마 전쟁 난민 지원 단체, 혹은 부패 방지 옹호 단체 등이 그 예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운영 활동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태도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국내

1) 백악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 기구, 협약 및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2026년 1월.
2) 태국 상무부, “무역 보고서”, 2026년 4월 20일

모금 활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의존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사회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총선 이후부터 2026년 총선 이후까지의 태국 정치 상황

국내 권리와 자유에 관한 상황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태국에는 62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150건의 판결이 내려졌고(지속적으로 증가 중), 1,997명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³⁾ 이러한 통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기후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헌법에 명시된 태국식 민주주의 체제, 즉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와 맞물려 촘촘히 구축된 국가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헌법의 메커니즘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방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상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정부 구성에 실패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왕실 모독죄(형법 112조) 개정 정책을 이유로 한 전진당의 해산,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세타 타워신 총리와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해임, 그리고 시민들이 헌법기초위원회 설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쿠데타의 지속적인 여파이며, 태국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민주주의 퇴보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개입하고, 입법부의 법안 제안 권리를 박탈하며, “사법화(judicialization)”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2020년 시위 당시 다루어졌던 군주제 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군주제의 구조적 개혁과 국가 정치 및 경제에 대한 개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결과는 오히려 국가 안보를 근거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왕실 모독죄 112조와 같은 법적 도구를 활용하며 입법부에서 정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승리를 기록한 2026년 선거 이후, 지역 정치인들의 연합체인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⁴⁾이 성공적으로 부상했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제한된 틀 안에서 새 헌법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누틴 찬위라곤 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의회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⁵⁾

“블루 네트워크(Blue Network)”⁶⁾는 현재 태국 정치를 정의하는 용어로, 하원의 다수가 품자이타이당 소속이며, 상원의 다수는 품자이타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선출되고, 독립 기관들은 상원을 통해 선택되며, 공무원들은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임명됩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짜인 폐쇄적인 “블루”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시민 부문이 국가

3)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 모임(TLHR), “2026년 3월: 112조 판결에 따른 ‘피바랏-나왓’: ‘프롬손’ 대법원 상고 대기 중 구 금; 칸루타이 총 15년형 선고”, 2026년 4월 3일.
4) Thai PBS World, “품자이타이당, 압도적 승리로 194석 확보”, 2026년 2월 8일.
5) 태국 내각 사무국, “국무위원 정책 성명”, 2026년 4월 9일.
6) “파란색(Blue)”은 품자이타이당이 사용하는 주요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품자이타이 네트워크 출신 상원의원들 에게도 적용되어 흔히 “블루 상원의원”으로 불립니다. 또한 파란색은 군주제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색으로도 통용됩니다.

권력의 공간에 침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현대 태국 정치의 간략한 요약이며, 시민 부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태국의 시민 부문

시민 부문은 정치 사면법, 공공 집회법 개정, 또는 조항별 헌법 개정 등 다양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캠페인해 왔으나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새 헌법 작성을 원하는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의회의 결의 이후 진행된 시민 부문의 캠페인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21,622,029표의 찬성표를 얻어 58.64%를 기록하며 정치 전선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권리 측면에서 국내 시민 부문은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는 성소수자(LGBTQIAN+)에게 결혼할 권리를 부여하는 혼인 평등법을 이끌어낸 성평등 옹호부터,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역 시민들의 힘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중단되었으며, 공공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태국의 공장 설립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 부문은 현재 정치인, 기업체, 공무원들에 의해 제기된 수많은 공공참여 봉쇄 전략소송(SLAPP)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국 국장은 바코드 관련 선거 부정 의혹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고소했습니다. 수차앗 촌쿨린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장관직 수행을 비판한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항, 특히 명예훼손 혐의와 형법 112조(왕실 모독죄)를 무기화하는 소송들은 시민사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언 (Recommendations)

필자는 보수적인 글로벌 및 지역적 정치 흐름 속에서 시민 부문의 참여 절차를 육성하고, 활동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민주주의는 시민 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의 특수한 맥락으로 인해 이러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맹 구축 및 참여: 시민 부문은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까지 정치적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 요구 사항을 추진하는 옹호자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지식과 이해를 전파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시민 부문의 주요 대립 상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을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는 공식적인 민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역 의회, 독립 기관 또는 의회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즉 문제를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2) 국제 협력 촉진: 태국에는 글로벌 기구와 연결된 여러 조직이 있지만, 비공식 시민사회 조직이 자금이나 기회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상호 연결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기 위한 토대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비전 공유: 시민 부문은 현재 파편화되어 있으며 인권, 헌법, 환경과 같은 문제 전반에 걸쳐 공통 요구에 대한 연대나 합의가 부족합니다. 조직들이 동일한 문제를 다룰 때조차, 시민사회는 통합된 요구를 통해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집단적 힘이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할 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는 추진하는 사회적 힘이 충분히 강력할 때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국제기구의 작동 메커니즘 약화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촉발된 지속적인 보수화 경향으로 인해 글로벌 상황이 시민사회의 성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은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필자는 강력한 글로벌 정치 흐름으로 인해 많은 조직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인권 침해 상황이 감시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단일 국가의 시민 부문이 독립적으로 옹호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집단적 과제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결속은 매우 시급하며, 민주주의 퇴보의 위기 속에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합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이행기정의세션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사회]

박래군 | 4.16재단 운영위원장

[여는발언]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조인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1]

세월호참사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 - 12년이 묻는 질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선우 | 4.16연대 사무처장

[발언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

이미현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3]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년 4개월 뒤,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의 실태

김유진 |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여는발언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조인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을 지냈으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그 후에 남는 것 – 트라우마

조 인 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I. 들어가며: 같은 자리에 놓인 두 이야기

이 세션은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를 같은 자리에 놓는다. 국가폭력은 국가가 직접 시민에게 행한 적극적 폭력이었고, 사회적 참사는 작동했어야 할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였다. 가해의 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남긴 자리는 같다. 국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진실을 알 수 없는 고통, 책임지는 사람 없이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같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 2차 가해와 혐오 속에서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고 재생산된다. 구조가 같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것, 그 결과로 피해자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적극적 폭력이든 소극적 부작위든 같은 방향의 국가 책임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그 후에 남는 트라우마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I. 트라우마의 특수성과 재생산 구조

1.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트라우마의 고유한 특성

사회적 참사는 예방 가능했음에도 제도적 실패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복합적 외상을 남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불운이 아니라 방치된 결과로 인식하면서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는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도덕적 상처(Moral Injury)이며, 이는 심리치료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수반되어야 한다. 트라우마는 사건 발생 시점에 끝나지 않고 진상규명 지연, 책임 회피, 역사 왜곡, 유사 참사의 반복을 계기로 현재진행형으로 재자극된다. 여기에 “보상금을 노린다”는 낙인과 2차 가해가 더해지면서,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 사회가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2. 한국사회에서 트라우마가 반복되는 구조

진상규명의 반복적 좌절, 피해자의 정치화와 낙인, 미디어의 2차 가해, ‘잊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결합되어 트라우마를 만성화한다.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진상규명 지연·책임자 처벌 부재·피해자 참여 제한이 결합되어 현재에도 계속 작동하는 구조적 상태다. 따라서 이는 치료나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행기정의의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III. 이행기정의의 원칙과 한국 현황

1. 반 보벤 원칙(A/RES/60/147)이 요구하는 국가 의무 및 한국 현황

원칙	요구 내용	한국 현황
원칙 1 국가의 일반의무	수사, 기소, 처벌, 배상, 재발방지를 포괄하는 불처벌방지 의무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나, 형사적 책임자 처벌은 극히 미진. 체계적 불처벌 패턴 반복
원칙 2 진실에 대한 권리	과거 사건의 상황과 이유에 대한 양도 불가능한 진실권	세월호 참: 사참위 활동 종료 후도 미해결.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지연. 공식 역사 기록화 미흡
원칙 3 기억 보존 의무	국가의 집단 기억 보존 조치 의무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조성 논란. 이태원 참사 추모와 애도의 공간 부족.
원칙 4 피해자의 알 권리	피해자·가족의 가해자 신원과 위반 상황을 알 권리	이태원 참사: 오히려 정보 차단이 정부 대응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
원칙 24 사면 제한	중대 국제범죄에 사면 금지	국가폭력 역사에서 군부 세력 사면 전례. 현재 사회적 참사는 처벌 자체 미흡

2. 불처벌방지원칙과 한국 현황

조이네/오렌트리치 원칙(2005)은 불처벌을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수사하지 않음·처벌하지 않음·진실을 공개하지 않음·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국가의 부작위 전체로 규정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진실위원회 설치→방해→종료→재설치의 순환이 세 차례 반복되었고, 이태원 참사에서는 국정조사→특수본 수사→합동감사→특별조사위원회로 절차만 반복될 뿐 진실과 책임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적 참사 대응은 구조적 불처벌 상태를 반복한다.

IV.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법 밖’에 있는 구조적 이유

한국의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 놓이는 핵심 이유는 치료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구성하지 않는 권리·의무 구조의 결함에 있다.

우선 현행 재난안전 및 피해지원 체계에서 피해자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가 아니라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만 규정된다. 그 결과 국가의 책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책적 재량으로 남게 되고, 지원은 권리로서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보다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시혜적 조치로 작동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보장되지 않고 참사 발생 시점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정치·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원 체계 역시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재난 대응은 주로 급성기에 집중되고 이후 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약화되며, 의료·심리·사회·경제 지원은 각각 분리된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특히 지원이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과 정책 변화에 따라 축소·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정의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위치는 제한적이다. 피해자는 진술의 주체일 뿐 절차 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진상규명 역시 한시적 조사기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공적 진실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해석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심리지원과 진상규명의 분리 구조는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진실과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치료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현실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여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낙인과 혐오가 결합되면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회복은 더욱 지연된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재발방지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개별 지원의 부족이 아니라, 진상규명·책임·배상·치유가 분리된 채 작동하는 제도 구조 자체에 있다.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재구성하고, 진실과 책임, 회복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다.

V. 해외 사례와 국가의 구체적 의무

국가폭력·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해외 입법례는 공통적으로 피해를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권리침해 상태로 구성하고, 국가의 의무를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계속적 법적 의무로 재구성한다.

- ① 시간 제한 없는 재할 의무 : 국가의 피해자 보호의무는 일정 기간의 행정지원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트라우마와 구조적 피해는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
- ② 국가의 자동 개입 의무: 피해자에게 신청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권리 실현을 제한하므로, 국가는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식별하고 지원체제로 연결할 의무가 있다.
- ③ 다층적·통합적 지원 의무: 의료·심리·법률·사회·경제 지원은 분리된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통합적 회복 체계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④ 관계적 피해의 인정: 피해는 개인을 넘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구조의 붕괴로 확장되므로, 이러한 파생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보상 및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
- ⑤ 피해자 참여권의 법제화: 피해자는 단순한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 진상규명 및 책임 절차의 당사자로서 진술권, 증거제출권, 이의제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⑥ 단일 창구 전달 체계: 행정 분절은 피해자의 권리 접근을 저해하므로, 등록과 동시에 통합 지원이 연계되는 단일 창구 체계가 필요하다.
- ⑦ 독립된 피해자 지원 기관: 피해자 지원은 개별 부처의 부수 기능이 아니라 정치·행정 변화로부터 독립된 지속적 국가 기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⑧ 진실(Truth) — 알 권리와 기록 보존: 진실규명은 단기 조사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국가 의무이며,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진술 과정과 지원을 결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종료되지 않고 교육과 기억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⑨ 정의(Justice) — 책임 규명과 처벌: 책임 절차는 처벌·진실·배상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진실 진술은 사법적 혜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건이 된다.

VI. 결론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이후에 남는 것은 트라우마만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이다.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발제에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들은 공통된 하나의 언어로 수렴한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 지속되는 상태이며, 치유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심리치료는 치유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절차의 주체로 서고, 재발을 막는 구조가 바뀔 때 비로소 치유는 가능해진다.

사회적 참사 대응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트라우마 치유, 회복을 각각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통합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는 제공자 중심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피해자의 경험과 필요를 기준으로 전체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며, 이행기정의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발언1

세월호참사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

- 12년이 묻는 질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 선 우 | 4.16연대 사무처장

대구4·16연대 집행위원장과 4·16연대 사무처장 및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왔으며, 현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세월호참사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

- 12년이 묻는 질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 선 우 | 4.16연대 사무처장

1. 참사는 언제 끝나는가

오늘 이 자리, 5·18의 도시 광주, 광주민주포럼에서 세월호참사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을 말하게 됐습니다. 5월 광주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끝내 진실과 책임을 받아내고 있는 역사라면, 세월호도 아직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재난참사는 언제 끝나는가. 피해자들에게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올해로 꼭 12년입니다. 희생자 304인의 가족들은 12년째 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해 완전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단원과 학생들은 이제 서른 살이 됐지만, 4월이면 몸이 그날을 기억합니다. 올해 발표된 의학 연구는 유가족들의 당뇨·뇌졸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정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겪어온 12년의 트라우마 실상, 국가 책임의 원칙은 무엇이며, 국가 책임을 묻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트라우마, 12년의 현실

① 생존자 -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단원과 생존 학생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 청소년기 발달 전반을 뒤흔든 복합 외상이었습니다. 연구¹⁾에 따르면 생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 주기적 재경험 : 세월호 기일(4월 16일) 전후, 희생된 친구의 생일, 잠수함·배 관련 뉴스 접촉 시 심장박동 이상, 스트레스성 위염·두드러기 등 신체 반응
- 생존 죄책감(Survivor’s guilt) : ‘왜 나만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수년간 지속
- 관계 단절 : 외부와 격리된 병원·연수원 생활이 친구들과의 작별 기회마저 빼앗았음
- 정체성 혼란 : ‘생존자라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낙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는 과정에서 지속적 어려움을 경험

2020년 학술 연구(보건사회연구 40권 2호)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단원과 생존자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트라우마 증상은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악화될 수 있음이 확인됐으며, 개별 회복 상태를 고려한 장기적 심리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²⁾

1,2) 한정민·장정은·전종설, 〈세월호 참사 단원과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보건사회연구 40(2), 2020 [https://doi.org/10.15709/hswr.20.20.40.2.9]

② 유가족 - 진실 없이 치유 없다.
유가족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Complex PTSD)’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과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슬픔을 슬퍼할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12년이 흘렀습니다.

- 기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 : 매년 4월이 되면 위기가 반복됨.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가족이 12주기가 된 현재도 다수 존재
- 연쇄 촉발(Trigger) :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참사(2023), 제주항공 참사(2024) 등 잇따른 재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월호 당일로 되돌아가는 재경험을 보고함
- 국가에 의한 2차 트라우마 :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형사 유죄·국가 배상 책임 법원 확정, 2023), 유가족을 ‘시체 장사’로 표현한 혐오 발언, 진상규명 방해 등 국가의 적대적 행위가 트라우마를 구조화함³⁾
- 진상규명 미해결이 치유를 막음 : 구조방기의 이유, 침몰 원인, 박근혜 7시간 등 핵심 질문에 여전히 답이 없다. 사참위 전문가들과 임상 심리학자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트라우마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경향신문 보도(2023.9.7.)에 따르면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참사가 정쟁화된 분위기가 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정책적 대처와 생존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기반으로 치유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사회적 상황은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⁴⁾

1) 12년이 지나도 울분은 줄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울분·우울·불안·자살 생각 지표가 2021년 소폭 나아졌다가 2024년에 다시 모두 악화됐습니다. 울분을 겪는 생존자 비율이 36.7퍼센트, 2017년 처음 조사했을 때 40.4퍼센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패턴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의 지표는 소폭이나마 하향세인데, 현장을 직접 겪은 생존자만 역행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트라우마가 다시 촉발되는 것입니다. 지원 체계는 이 패턴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서른이 됐지만, 아직도 그날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이마저도 힘든데, 서른이 돼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나, 스스로 괴로워한다. 세월호참사를 면죄부로 삼는 게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 생존자 전체에 낙인이 찍힐까 봐 느끼는 스트레스도 항상 있다.” - 생존 학생 A씨, 오마이뉴스 2026년 4월 16일⁵⁾

3) 기무사 사찰 형사: 대법원 2023.7.20 일부 확정 (SBS 2023.7.20); 국가배상 민사: 서울고법 2023.1 확정·국가 상고 포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76380]
4) 경향신문 〈[여전히, 세월호] 켜켜이 스며든 4월의 트라우마〉 2023.9.7 — 백종우 교수 발언·제주 생존자 현황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070600001]
5) 오마이뉴스 〈안산마음건강센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2024)’ 2026.4.16. [https://v.daum.net/v/2026.0416150812661]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살아남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12년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현실입니다.

2) 몸도 병들었습니다.

올해 12주기를 앞두고 중앙대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연구팀이 10년치 진료 기록 분석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⁶⁾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을 비교했더니, 참사 7년 차 이후에도 유가족의 당뇨 등 내분비·대사성 질환 발병은 일반인의 2.11배, 뇌졸중 위험이 있는 신경계 질환은 1.44배였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연간 1.56회 더 많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심리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됐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나 피해자 비난 같은 사회·정치적 역학관계는 정상적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 이원영 교수 연구팀, 2026년 4월

트라우마를 악화시킨 것은 사고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비난받는 환경이 트라우마를 만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3) 왜 1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12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 방기의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은 봉인된 채입니다. 기무사는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2023년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⁷⁾, 불법사찰 등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는 아직입니다. 특조위 조사를 청와대와 해수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사참위 종합보고서에 기록됐지만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임상 연구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리 상담만으로 복합 트라우마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세월호 트라우마의 만성화는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3. 국가의 책임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1) 국가가 만든 참사, 국가가 회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이 퇴선 방송 한 번 없이 선원들만 먼저 탈출시키는 동안 304인이 배 안에서 죽어간 사건입니다. 국가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고, 국가의 부작위가 죽음을

6) 이원영 외, ‘세월호 참사 유가족 건강 악화 연구’, 유럽 심리외상학 저널(2026.4 게재), 디지털타임스 2026.4.14 보도 [https://v.daum.net/v/20260414213402301]
7) 기무사 사찰 형사: 대법원 2023.7.20 일부 확정 (SBS 2023.7.20); 국가배상 민사: 서울고법 2023.1 확정·국가 상고 포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76380

만들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국가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해도, 국가의 책임은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국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잘못으로 참사를 만들었다면, 회복의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지원은 피해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기관을 찾아 등록하고 신청해야 지원이 됩니다. 트라우마의 핵심 증상 중 하나는 회피입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찾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⁸⁾ 피해자 다수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돌볼 여유가 없어 의료지원 부스조차 찾아가지 않았다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진상규명 없이 치유는 없습니다.

임상 연구들의 일관된 결론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실을 알고, 책임을 확인해야 트라우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그 조건을 12년이 지난 지금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은 봉인되었으며, 기무사(현, 방첩사)가 파기한 7상자의 문서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자료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구조 방기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12년째 답을 기다립니다. 이 상태에서 ‘트라우마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에게서 찾는 것은 잘못입니다.

3) 지원에 기한을 두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2029년 4월에 또 만료됩니다. 2017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는 피해자 약 1,000명은 기한이 다가오는 불안 속에서 오늘을 삽니다.⁹⁾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맘때 되니 온몸이 아프다.” - 고 지상준 군 어머니 강지은씨, 노컷뉴스 2026년 4월 17일¹⁰⁾

“몸이 4월을 기억한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된다.” - 의인 김동수씨 아내 김형숙씨, 노컷뉴스 2026년 4월 17일¹¹⁾

트라우마 회복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입니다. 상처에 ‘치료 기한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8) 사참위 권고사항 전문, 4.16연대 <2026년 사참위 권고 14대 중점 점검 과제> 2026.04.14.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8iRGpeCM5_8wt9snloqstXwTYkqL0y9G9frMFD_Gwg]
9)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20428호 (2024.6.4 시행) —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2029.4.15까지 연장. 해수부 유감 표명 2024.04.18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6084]
10,11) 노컷뉴스 <유효기간 없는 1천개의 트라우마…시한부 지원 연장해야> 2026.4.17. [https://www.nocutnews.co.kr/news/6503770]

4) 책임이 분산되면 책임은 사라집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총괄 조정 기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겸직하는 구조입니다. 해수부는 추모시설 관련, 복지부는 심리 지원, 행안부는 제도 개선.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사참위 직라-14 조사결과보고서는 세월호 당시 여섯 개 이상의 부처와 민간기관이 각각 분산 지원하는 ‘중구난방’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재난 심리 지원의 총괄 지휘기관을 단일화하고 그 책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련이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12년 동안 바뀌지 않은 핵심입니다.

4. 국가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참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지원금 기한을 즉각 삭제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을 ‘2029년까지’가 아니라 ‘치유시까지’로 개정해 의료지원 기한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올해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기한 삭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¹²⁾ 이번에는 5년 연장이 아니라 치료 기한 삭제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함께 요구합니다. 민간잠수사들이 12년째 공식 피해자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참위 권고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수습에 참여했다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더 이상 제도 밖에 두어선 안 됩니다.

2) 추가 트라우마 배상을 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지역 생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5년 11월 법원은, 심의위가 피해자들의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신청 기간도 짧았으며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¹³⁾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는 12주기가 지나도록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책임을 행정이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트라우마 배상심의를 즉각 개최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진술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3) 요구 3 –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사참위 직라-14 조사결과보고서는 재난 심리지원의 세 가지 핵심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총괄 지휘체계 단일화, 구조 직후 72시간 심리적 응급처치 의무화, 중장기 심리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이 세 가지가 4년이 지난 지금도

12) 네이트 뉴스 <김현 의원,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추진> 2026.4.10. [<https://news.nate.com/view/20260410n27280>]

13) 경향신문 <[여전히, 세월호] 켜켜이 스며든 4월의 트라우마> 2023.9.7. – 백종우 교수 발언·제주 생존자 현황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070600001>]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에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4)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트라우마 치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왜’를 알지 못하는 한 회복은 불완전합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방첩사가 파기한 7상자의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십시오.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미공개 기록물을 공개하십시오. 작별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라는 것. 유가족들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하라는 것. 그것이 진상규명이 트라우마 치유와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등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참사의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부터 반복 발의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아직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의 기본권 명시 / 사회적참사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 국가 의무화 / 기한 없는 지속 지원 /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능동적 지원 체계 / 피해자 알 권리·참여권 보장 / 2차 가해(혐오·낙인) 방지 법적 근거 / 상설 독립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12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다음 참사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싸움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5.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것은,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한 유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작별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라. 자식을 잃은 사람이 직접 증거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하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삶, 치료, 트라우마, 진실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고정하라.” – 2026년 4월 15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문화제, 오마이뉴스¹⁴⁾

14) 오마이뉴스 <작별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유가족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2026.04.1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5149]

발언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



이 미 현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 중이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

이 미 현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1. 참사는 언제 끝나는가

참사 발생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조사는 늦어지고 있고 공직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늦어지는만큼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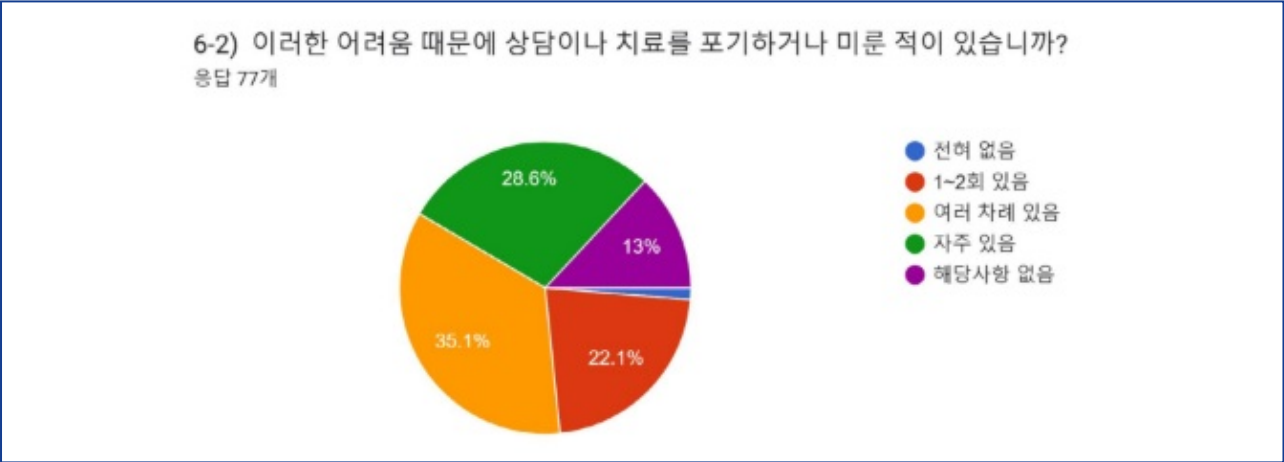
편차는 있지만 상당수 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나 살겠다고 병원다니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나 남겨진 자식이 신경쓰여서 감정을 표출하거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유가족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2025년 이태원 참사 특별법 1년을 즈음해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7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 중 심리 상담 및 치료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으려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적이 있는지, 참사 피해자 전담 심리 치료 시설이나 상담센터가 있습니까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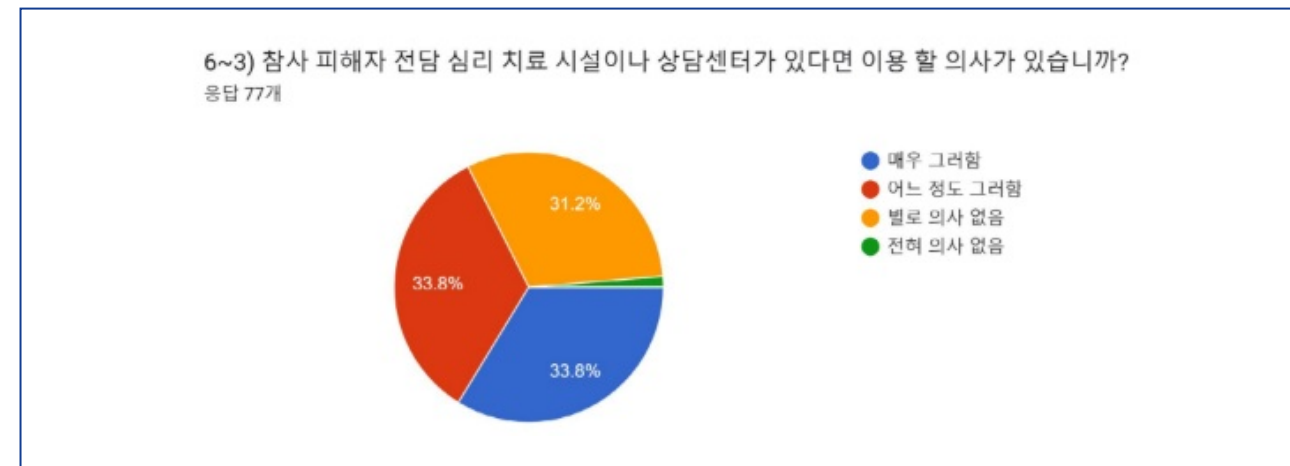


설문 응답에 의하면 유가족들이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입증하라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식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참사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가족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하는 2차 가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실과 고통의 순간을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치료적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외에도 병원을 바꿀 때마다 새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일과 복잡한 지원 신청 절차 등 절차적 복잡성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약 85.8%의 유가족이 상담이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조기 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사 피해자 전담 심리치료시설이나 상담센터가 있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약 6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전문화된 지원 체계에 대한 강한 요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참사 피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특화된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특징 중 하나는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와 구조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공식 부상자 통계(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따르면 내국인 284명, 외국인 53명 총 337명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라고 하지만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참사 이후 생존자들에게 참사의 가해자인냥 낙인을 찍고 근거없이 마약과의 연루 가능성을 흘리는 등 2차 가해가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포기하고 고통 속에서 3년 반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절차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하듯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사각지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서비스 제도에서도 수급자들에게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요구할 경우 수급 요건에 해당됨에도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신청 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극심한 상태로 치닫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자와 구조자들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인 희생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는 참사에서 살아돌아왔지만 참사 발생 40여일 후에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조자로 나섰던 소방관이 참사 발생 2년이 지나서도 죄책감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은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 구조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끔찍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소방,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도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내국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유가족들은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접할 방법이 많지 않고 언어적 제약으로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외국인 유가족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는 힘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트라우마 속에 한국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의 방침이나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소식을 알고 싶어도 언어의 한계로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고립감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심리지원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난참사 대응 체계가 철저히 외면한 외국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도 시민사회에게 남겨진 역할입니다.

참사의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적 제도가 안착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생명안전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멍니다. 참사 피해자 전담 심리치료센터의 설립, 연속성 있는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피해자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치료 문화와 제도적 개선,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남겨진 개선점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의 분절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심리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통 없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년 4개월 뒤,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의 실태



김 유 진 |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은 (사)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자 희생자 김덕원, 정선숙, 김강헌의 유가족이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년 4개월 뒤,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의 실태

김 유 진 |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1. 시작하며: 멈춰버린 시계와 국가의 부재

안녕하십니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입니다. 민주주의와 이행기 정의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우리 가족들이 쓰러져갈 때도, 그리고 참사 이후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가는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유가족들의 시계는 참사 당일의 고통 속에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과, 진실을 향해 걸어온 처절한 투쟁의 기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수습되었다”고 포장된 참사의 민낯

이행기 정의란 비극적인 참사 이후 국가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현장을 지우기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악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수습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안공항에 야적된 기체 잔해와 활주로끝에서 가족들의 유해를 직접 수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치러야 할 장례를 마주하며 유가족들은 깊은 막막함 속에 서 있습니다.

은폐와 방치로 점철된 시간들

국가는 초기에 국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였으나,실상은 빠른 수습과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로 언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참사 발생 보름 만에 모든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화려한 추모식과 특별법 제정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핵심인 ‘진상규명’이 빠져 있었고, 약속된 지원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빠르게, 잘 수습된 참사’라는 수식어는 유가족들을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2. 본 참사의 네 가지 문제: 조사 지연, 수사 지연, 유가족들의 참여권 배제 그리고 부실수습

첫째, 조사기구의 의 기본 원칙: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의 결여

항철위는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사의 과오를 덮어주며 이익을 공유하는 소위 ‘국토부 카르텔’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사관 대부분은 민항기 조사 경험이 없는 은퇴자나 헬기 조종사 출신이었고, 국제 규정(ICA0)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유가족에게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결과가 오염되면 유가족들의 배보상에 영향을 줄수 있다며 국제규정을 빌미로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삭발과 밤샘 농성등 강경한 투쟁으로 항철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되어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었지만, 인력과 조직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조사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전남경찰청의 소극적 수사와 지연

초기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항철위의 조사 결과만을 의지하며 수사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고, 1년간 전담 수사관 4명에 구속 0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2월 유가족의 요구로 특수단이 설치되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애타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부실 수습이 불러온 참혹한 유해 방치

이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민간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첫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고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과 태도가 이 국가가 국민들을 대하는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해수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2월, 공항 아스팔트 위에 방치되어 있던 기체 잔해 개선 작업 중 제 아버지의 25cm가 넘는 정강이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불타 남은 것이 없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비바람에 노출된 채 1년 넘게 방치된 잔해 속에서 수천 점의 유품과 유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을 쓰레기더미안에 내팽개쳐 두었다는 죄책감과 무력함에 유가족들은 또다시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3일, 기체 잔해를 넘어 참사 현장 전반에 대한 재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단 2주 만에 천여 점에 달하는 유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초기 수습이 얼마나 졸속이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존엄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과 유가족의 요구

우리는 1년 4개월 만에 유가족들의 절실한 요구로 발굴해낸 1,313점의 유해 앞에서 국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멈춰선 진상규명의 재개와 자료 공개:

국가의 방치와 외면으로 지연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유가족에게는 살을 에이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연된 시간만큼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참사 초기부터 항철위가 은폐해온 블랙박스(FDR·CVR)를 포함한 모든 사고 데이터를 즉각 공개 하십시오

둘째,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지원 및 마지막 예우를 위한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인 재수색에 단 한 점의 유해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또한, 거둬들인 조사 지연과 유해 방치로 무너져 내린 유가족의 삶에 대한 지원 대책과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분향소 설치와 장례 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항철위의 독립성 확보와 복합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토부의 부당한 개입이 '유해 방지'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새로운 항철위는 과거의 과오를 딛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는 독립적 조사 기구로 거듭나 유가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조류 충돌, 관제, 기체 결함, 둔덕, 인적 요소 등 복합적인 참사 원인에 대해 성역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넷째,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 :

1년 4개월간 단 한 명의 구속자도 없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예외 없이 엄중히 기소하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또한 참사 원인 제공자는 물론, 부실 수습과 은폐에 가담한 공직자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4. 맺음말: 유가족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정의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5월 10일, 광주 민주광장 앞 YMCA 1층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시민분향소가 다시 세워집니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부디 따뜻한 발길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자 우리 가족들의 유해와 참사의 진실이 차가운 무안공항 들판에 버려지지 않도록, 단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땅에 이런 슬픔이 허락되지 않도록 부디 지친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광주의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주십시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언론세션

분쟁지역 영상저널리스트의 기록과 상처

[사회]

채 영 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발제1]

외상에서 상으로: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조 재 희 |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발제2]

분쟁 지역 취재 저널리즘

필립 콕스 |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토론1]

외상에서 상으로: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임 인 재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2]

카메라 뒤의 상처

신 봉 승 |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 영상기자

발제 1

외상에서 상으로

: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조 재 희 |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살럿과 중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외상에서 상으로
: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조재희 |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CONTENTS

목차

I

들어가며

문제제기 · 연구 목표 · 이론적 배경 · 연구문제

02 — 05

II

양적 방법과 결과

국내 영상기자 119명 대상 설문 데이터 기반 경로분석

06 — 11

III

질적 방법과 결과

힌트팩터 국제보도상 국내·외 수상자 8명 대상 서면 인터뷰 데이터 기반 주제분석

12 — 17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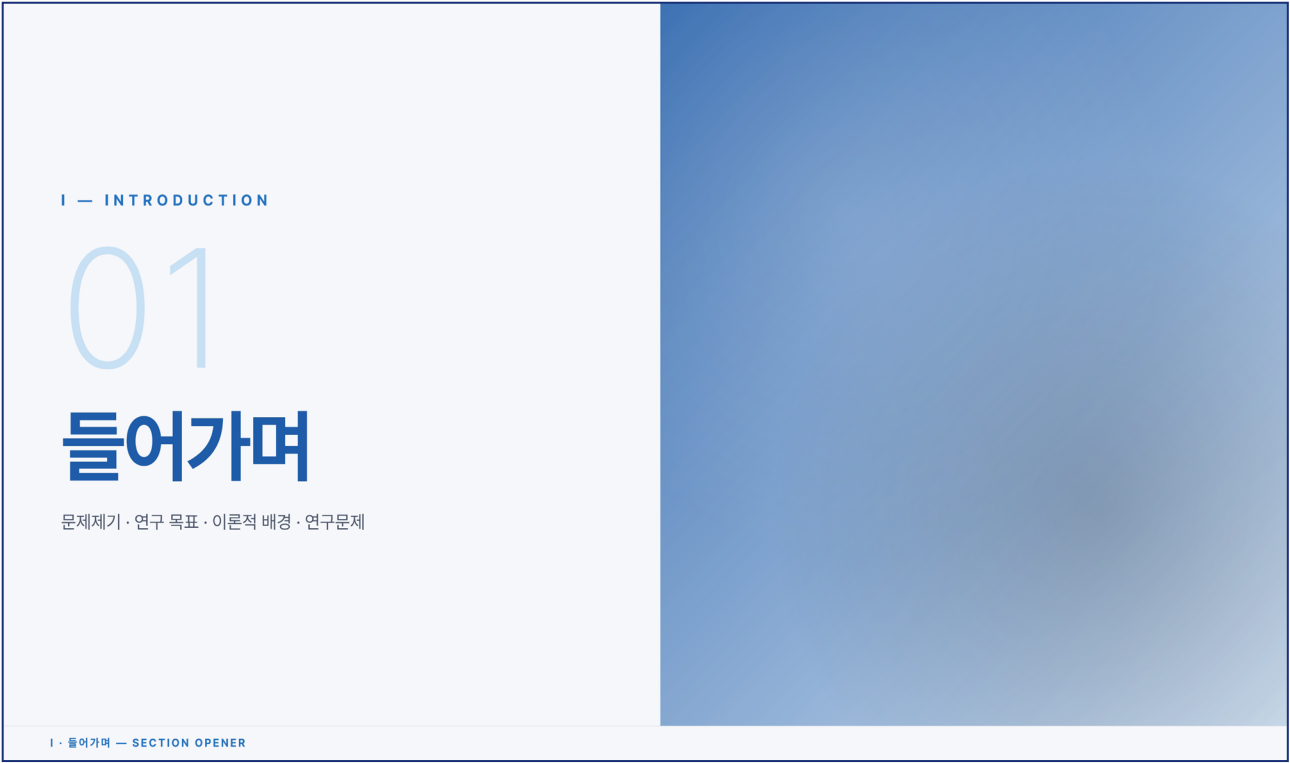
결언

결언 메시지 · 이론·실천적 함의 및 한계 논의 · 후속 연구 제언 및 Q&A

18 — 19

한국영상기자협회 · 서강대 레메디아 연구단 · 2026.05.16

01 / 20



I — 들어가며

문제제기와 연구 목표

문 제 제 기

- 영상기자 = 사고·재난·폭력·인권 침해 현장의 **일선 기록자** — 직무 수행 자체가 외상유발사건과의 반복적 접촉을 동반하는 직군
- 1980 5-18 → 2014 세월호 → 2024 12·3 계엄 — 기록자로서 영상기자의 중요 역할 및 영향력 반복 관찰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계 내 관련 이론적 **두 갈래** — 저널리즘 외상 연구(손상 경로) · 저널리즘 직업 소명·이데올로기 연구(회복 경로)가 같은 직군 안에서 동시 작동하나 통합 검토 미진
- 본 분야 통합 이론 틀 부재 — 변수별 주요 이론 위에 자원 흐름을 묶는 임시 토대로 인접 학문(COR · JD-R · WCT) 보완 필요
- 공적 인정 사건(힌츠펠터 국제보도상)이 회복 경로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 직장 내 풍토가 양 경로에 어떤 자원으로 작용하는지 경험적 검토 부족

연구 목표

- 국내 영상기자 직군의 **손상 경로 · 회복 경로 자원 흐름** 구조를 한 모형 안에서 통합 검토
- 외부의 공적 인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힌츠펠터 인지·영감)이 **회복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혼합방법으로 탐색

궁극적으로 영상기자들의 정신건강 증진 가능성 도모

I · 들어가며 — 문제제기·연구 목표

02 / 20

I — 들어가며

이론적 배경

01 본 분야 통합 이론 틀 부재

저널리스트 외상 연구는 누적되어 왔으나, **자원 흐름의 통합 이론** 틀은 본 분야 안에서 명명·확립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Slavtcheva-Petkova et al., 2023).

02 직무 자원·요구 모형의 적합성

연구주제와 **JD-R의 건강 손상 과정 + 동기 과정** 간 접점 포착 (Schaufeli & Taris, 2014)

03 자원 보존 이론의 차별적 유용성

COR의 자원 손실 나선·자원 캐러밴 가정은 본 연구의 손상·회복 경로 및 두 자원(외부 공적 시상 · 직장 내 존중컴 풍토)의 역할 탐색을 위한 **토대로 활용 가능** (Hobfoll, 1989; Hobfoll et al., 2018)

I · 들어가며 — 이론적 배경

04 / 20

I — 들어가며

이론적 배경

본 분야 1차 토대 + 인접 학문 보완

검토 대상	본 분야 1차 토대의 예	인접 학문 연구의 예
직업 정체성 · 소명	Deuze (2005) · Hanitzsch & Vos (2018) 등 저널리스트 연구	직업 소명 이론(WCT,Duffy et al., 2018)
공적 인정 · 수상	Nölleke 외 (2023) · Kibarabara 외 (2023) 등 저널리스트 연구	—
직업적 확산	Cheney (1983) 등 조직커뮤니케이션 연구 특화	—
직장 내 존중컴 풍토 · 종사자 안녕	Eisenberger 외 (1986) · Costigan & Schmeidler (1984) 등	직무 자원, 요구 모형(JD-R, Demerouti, 2001)
518 역사적 준거	최정운(1999) · 정근식(2003) · Edy (1999) · Karp(2023) · Zelizer (2008) 등	Halbwachs (1992) · Alexander(2004) 등
외상유발사건 경험 → PTSD · 번아웃	(Backholm · Feinstein · Newman) 저널리즘 외상	—
외상 후 성장 (PTG)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 내 직접적 이론 부재	Tedeschi & Calhoun (2004)
자원 흐름 통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 내 직접적 이론틀 부재	Hobfoll (1989); Hobfoll et al. (2018) 등

I · 들어가며 — 이론적 배경

03 / 20

I — 들어가며

연구 문제

RQ 1 양적 · 회복/성장 경로

국내 영상기자의 **힌츠펠터 국제보도상** 인지도와 영감 경험, 직업적 확산, 외상 후 성장, 현장 업무 지속 의지 간 관계는 어떠한가?

RQ 2 양적 · 회복/성장 vs 손상 경로

직장 내 **존중컴 풍토**는 손상 경로(외상유발사건 경험·PTSD·직무 이탈성 번아웃)와 회복/성장 경로(RQ 1의 변수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RQ 3 질적 · 의미화

국내외 힌츠펠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는 자신의 **수상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가?

I · 들어가며 — 연구문제

05 / 20

II — QUANTITATIVE

02

양적 방법과 결과

국내 영상기자 119명 대상 설문 데이터 기반 경로분석

II · 양적 방법과 결과 — SECTION OPENER

II — 양적 방법과 결과

측정 도구

양적 — 척도 9종 (외상유발사건 경험 이진 / 그 외 리커트 1~7)

변수	변용/차용 출처	문항수	신뢰도
외상유발사건 경험	JTES (Pyeovich et al., 2003)	23	.871
PTSD 증상	K-PCL-5 (Weathers et al., 2013; Kim et al., 2022)	5	.891
직무 이탈성 번아웃	BAT-4 MD (Hadžibajramović et al., 2024)	3	.704
직장 내 존중감 풍토	Costigan & Schmeidler (1984)	4	.892
헌츠페터 인지	자체 개발 ¹	3	.878
헌츠페터 영감	자체 개발 ¹	4	.954
직업적 혁신	OIS (Meigosa, 1987)	7	.903
외상 후 성장 (PTG)	PTGI (Cann et al., 2010)	10	.825
현장 업무 지속 의지	RRTW (Franche et al., 2007)	4	.795

¹ 참고: 영감 심리학 (Thrash & Elliot, 2003), 역할 모델링 동기 이론 (Morgenroth et al., 2015), 저널리즘 사상의 양가성 (Nölleke et al., 2023; Kibarabara et al., 2023) 등

II · 양적 방법과 결과 — 측정 도구

07 / 20

II — 양적 방법과 결과

표본 — 협회 회원 영상기자

N = 119 · 주요 변수 9개 모두 응답한 사례

● N

119

● 평균 · 표준 편차

13.9

개인 특성

항목	분포
성별	남 94.0% (110) · 여 6.0% (7) (결측 2)
연령	M = 42.3 · SD = 9.4 (27~81)
근속 연수	M = 13.9 · SD = 8.8 (1~32)
학력	대졸 83.8% · 대학원 15.3%
혼인	기혼 72.1% · 미혼 27.0%

직업 · 지역

항목	분포
소속	지상파 64.0% · 종편 27.0% · 케이블 5.4%
주 담당	사회 71.2% · 정치 17.1% · 경제 9.0%
가구소득	450~650만 37.8% · 300~450만 31.5%
지역	서울 45.9% · 광주·경기·제주 각 7.2%

81세 응답자 1명 = 협회 회원 자격에 은퇴자/교육 인력 포함 결과 · N=118 민감도 분석 결과 동일 ·

II · 양적 방법과 결과 — 표본

06 / 20

II — 양적 방법과 결과

국내 영상기자의
외상유발사건 경험과 심리적 손상 실태

N = 119 · 협회 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 응답자

● 23개 외상유발사건 중 7건 이상 직접 경험

75.6%

n = 90 / 119

● 23개 외상유발사건 중 12건 이상 직접 경험

41.2%

n = 49 / 119

● PTSD 증상 평균

3.63¹⁷

SD = 1.37

● 직무 이탈성 번아웃 평균

3.71¹⁷

SD = 1.23

영상기자 직군은 외상유발사건에 광범위하게 노출(23건 중 7건 이상 경험 75.6%) · PTSD 증상·번아웃 평균은 7점 척도 중간점 인근

II · 양적 방법과 결과 — 관련 실태

08 / 20

II — 양적 방법과 결과

연구문제별 결과의 요약

N = 119 · 9 변수 · AMOS 28 · 부트스트랩 5,000회

손상 경로

외상유발사건 경험 → PTSD 증상 → 직무 이탈성 번아웃

[연구문제1의 결과] 힌츠페터 인지와 영감 경험의 역할

힌츠페터 인지 → 힌츠페터 영감 → 직업적 확신 → 외상 후 성장 (PTG) → 현장 업무 지속 의지

[연구문제2의 결과] 직장 내 존중컴 풍토의 역할

번아웃 ↓ 보호 직업적 확신 ↑ 부스팅 PTG ↑ 부스팅 지속 의지 ↑ 부스팅

II · 양적 방법과 결과: 경로분석09 / 20

II — 양적 발견 · 한 줄 정리

국내 영상기자 직군에서 손상과 회복/성장의 가능성이 함께 관찰되며, 직장 내 존중컴 풍토가 양 경로의 다리 자원

외부 공식 시상(힌츠페터)는 회복 경로 부스팅 자원으로 작동

II · 양적 방법과 결과 — 한 줄 정리11 / 20

II — 양적 방법과 결과

연구문제별 결과의 요약

- 5개 적합도 지수 모두 학계 권장 컷 통과 — 9변수 관측변수 경로분석 모형의 통계적 정합성 확보

- 손상 경로: 외상유발사건 경험 → PTSD 정적 연관 · PTSD → 번아웃 정적 연관 · 풍토 → 번아웃 가장 큰 부적 연관

- 회복/성장 경로: 힌츠페터상 인지에서 영감·직업적 확신·PTG를 거쳐 현장 근무 지속 의지로 이어지는 4단계 직렬 매개 효과

- 조직 내 존중컴 풍토는 양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한 역할

II · 양적 방법과 결과10 / 20

III — QUALITATIVE

03

질적 방법과 결과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국내·외 수상자 8명 대상 서면 인터뷰데이터 기반 주제분석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SECTION OPENER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질적 방법 — 비 동기 이메일 인터뷰 + RTA

자료 수집 · 참여자

비 동기적 서면 인터뷰

- 이메일 질문지 → 자기 시점·환경 비실시간 응답
- 다집단 질적 연구 적합성 (Harris, Shaw, & Green, 2024)
- 시차·언어 제약 완화
- 의미 등가성 우선 번역 통합 분석

참여자 N = 8 (의도적 표집)

- 국내 4명 (P1~P4)
- 국제 4명 (P5~P8)

인터뷰 10 문항

Q	카테고리
Q1	수상 배경 · 취재 동기
Q2	수상 직후 경험
Q3	직업적 자부심 · 소명감 영향
Q4	취재 동기의 변화
Q5	심리적 어려움 · 복귀
Q6	조직 소통 환경
Q7	동료 · 후배에 대한 영향
Q8	삶 · 가치관의 변화
Q9	헌트패터상의 직업군적 의미
Q10	기타 자유 응답

분석 절차 · 표본 정당화

RTA 6단계 (Braun & Clarke, 2006/2019)

- 01 자료 익숙화
- 02 초기 코딩 (의미적 + 잠재적)
- 03 잠재 주제 탐색
- 04 주제 검토
- 05 정의 · 명명
- 06 보고

표본 크기 정당화 — 정보력 모형

- 5요인 검토 (Matterud et al., 2016)
- RTA N=6~10 의미 발견 (Wutich et al., 2024)
- 일반화 단위 X · 메커니즘 보강·심화 단위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방법12 / 20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주제 2

수상의 귀인 — 집단 vs 개인의 책무

국내 4명 — 외부 / 집단 귀인

P 1

"동일한 사명감으로 임했던 다수의 동료 언론인이 존재했기에, 본 수상이 지닌 대표성과 그에 따른 무게감을 체감했습니다."

P 2

"그 날 저보다 먼저 도착했던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킨 숨은 영웅이고, 저는 그저 전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 3

"국회로 취재 명령을 받은 것은 운(運)이라 생각합니다."

→ 자기를 집단의 일원으로 환원 — 개인의 공을 집단으로 분산

국제 4명 — 자신의 책무

P 6

"나는 이 상을 하나의 책임으로, 이 이야기가 거부당하거나 무시되는 공간으로 더 밀고들어갈 기회로 본다."

P 5

"취재 대상과 사안에 대한 나의 책임이 ...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P 7

"이 상을 받는 걸, 그들의 목소리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으로 여기겠다"

→ 취재 대상에 대한 책임 이행 확인 — 자기를 책임의 주체로 유지

참조틀 — 상호의존적 vs 독립적 자기 (Markus & Kitayama, 1991) — 단일 문화 귀인 틀로 환원 X

III · 주제 2 — 수상 귀인14 / 20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주제 1

직업적 방향의 연속성과 강도 변화

응답자 간 유사성

- 8명 모두 '수상 후 태도 근본적 변화 없음' 보고
- 동시에 직업적 자부심·시선의 심화 함께 보고
- 수상 = 책임감 생성이 아닌 강화 / 재확인 의 계기
- 양적 발전(인지 → 영감) 메커니즘 정밀화

P 6

"이 상은 나의 책임감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책임감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었고, 상은 그것을 확인하고 더 넓은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해 주었다."

P 1

"언론인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적 일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본 수상은소명 의식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P 4

"단순한 속보 경쟁을 넘어, 한 장면이 가지는 의미와 그 기록이 훗날 어떤 시선으로 남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III · 주제 1 — 직업 방향 연속성13 / 20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주제 3

진행형 사건에 대한 의식

응답 양태

- Q2(수상 직후 경험)에서 일부 참여자 기쁨과 이질적 감정 혼재 보고
- 공통 조건 — 취재 대상의 고통이 수상 시점에도 진행 중
- 도덕적 긴장·생존자 죄책감 인지 패턴

참 조 틀

- 생존자 죄책감 (Murray et al., 2021)
- 외상 죄책감 메타분석 (Kip et al., 2022)
- 저널리스트 도덕적 부상 (Feinstein et al., 2018)
- 소방관·구급대·경찰 도덕적 부상 리뷰 (Lentz et al., 2021)
- 죄책감 → 의도적 반추 → PTG (Wang et al., 2020)

P 6

"나의 반응은 단순한 기쁨의 감정이 아니었다. 인정과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우리가 기록한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또한 불편함이기도 했다. 우리가 촬영한 아이들은 끝난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진행 중인 이야기의 일부다."

P 2

"수상 뒤엔 상을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대한민국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P 7

첫 감정 — "무력감" 같은 응답에서 "그들의 용기와 지원에 보답할 유일한 길은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도록 하는 것."

III · 주제 3 — 진행형 사건15 / 20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주제 4

조직 형태별 심리적 지지망 3유형

i

동료끼리 서로 챙기는 문화

P3

"수평적으로 서로 상담-위로 격려하는 조직문화"

P1

"조직 내부에서도 동료가 겪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 했습니다."

P2

"평상시에도 선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

P6

"팀 내 지속적 논의" + 수상 이후 "보다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ii

체계적/전문가 지원

P8

"우리는 직장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심리상담사들과 힘든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다. 경영진과 힘든 경험을 이야기 나눌 여지는 많지 않다"

P4

외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심리 상담 지원 → "선택이 아닌 필수"

P7

"견고한 지원 체계와 상사와의 개방적 소통이 수상 전후 일관"

iii

기타 (프리랜서): 외부 공식 인정

P5

"I work as a freelance and alone"

P5

수상이 "내가 감수한 위험에 가치와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큰 영향"

III · 주제 4 — 조직 지지망 3유형16 / 20

IV — CONCLUSION

04

결언

통합 메시지 · 이론·실천적 함의 및 한계 논의 · 후속 연구 제언 및 Q&A

IV · 결언 — SECTION OPENER

III — 질적 방법과 결과 · 주제 5

5.18 역사적 준거와 회상 조절

— 국내 4명 한정

5.18 역사적 준거

P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마음속 깊이 남아 있던 '기록하지 못한 빛'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같은 듯한 감정이 크게 자리했다."

"기록되지 못했던 지난 과오에 대한 빛을 갖고, 다시는 같은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

P3

"'헛페터상'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기에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소명의식의 무게를 간접적으로 비교 경험할 수 있었고."

P1

헛페터상의 "민주주의와 인권 기록이라는 상징성"

— 자신의 취재 결과물이 "향후 역사적 사료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닐지" 고찰

회상 조절의 두 양태

P1 — 회상 조절

"수상 이후 트라우마가 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그뻔 그랬지 식의 과거 회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대신해서 받은 느낌이라 수상 이후에 추가적인 소통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 의도적 회상 제한

P4 — 회상 표출 + 치유적 재의미화

"내 선택과 행동에 따라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날의 긴장감이 다시 떠오르며 소름이 돋기도 했다."

수상을 "트라우마를 견뎌낸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치유의 과정"으로 의미화

참조물 — 저널리즘 집단 기억 (Zelizer, 2008; Edy, 1999) · 5.18 절대공동체 (최정운, 1999) · 광주 기억 (Karp, 2023) · 인접 — Halbwachs · Alexander

III · 주제 5 — 5.18 역사 준거17 / 20

IV — 통합 메시지 A

외부 공식 시상은 새로운 소명을 생성하는 계기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책임감의 공식 타당화 · 인지 → 영감 직렬을 통해 회복 경로 작동에 가속하는 역할

IV — 통합 메시지 B

(양적 연구) 조직 내 상호존중 풍토/ (질적 연구) 동료 간 문화가 중요하지만, 기타 심리적 지지망도 간과될 수 없음

IV — 통합 메시지 C

직장 내 존중풍토 = 양 경로 광역 자원 · 외부 공식 시상 = 회복 경로 특수 자원 · 두 자원은 보완재 · 자원 부재 조건에서 외부 인정이 대체 역할

IV — 통합 메시지 D · E

D. 양적 연구에서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도 포착

E. 같은 PTG 점수도 회상 조절 vs 표출이라는 다른 양태를 지닐 수 있음

IV · 결언 -통합 메시지 A-E18 / 20

176

177

IV — 결론

이론적·실천적 합의 + 한계 + 후속 연구

이론적 기여

01 저널리즘 외상 + 소명·이데올로기 두 흐름 결합 — 한국 영상기자 직군의 손상·회복 이중 경로 안에서 통합 검토

02 저널리즘 사상의 회복 경로 부스팅 양상 검증 — 인지 → 영감 → 직업적 확신 → PTG → 지속 의지 4단계 직렬 매개

03 풍토 = 양 경로 다리 자원 — 조직커뮤니케이션 풍토·조직 지지 지각(POS)·조직 정체화 연구를 영상기자 자원 흐름에 적용

04 5·18 역사적 준거 침투 — 저널리즘 집단 기억 연구를 한국 영상기자 직업 정체성에 경험적 적용

05 인접 학문의 성과 활용 — COR·JD-R·WCT·PTG 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

실천 합의

정책 1순위 — 일상적 풍토 조성·매일 작동하는 존중·지지 풍토가 양 경로 광역 자원

외부 공식 시상은 보완 자원 — 회복 진입 이후 정체성·성장 부스팅·손상 직접 보호로 광고 X

외상 직후 위험군 — 직장 내 존중풍토 개선 + 임상 개입(EMDR·외상 상담) 선행

언론상 제정 기관 — 수상자 사후 심리 지원 체계·프리랜서 별도 트랙 (네트워크·재정 안정 포함)

국내 영상기자 조직 — 비공식 연대(유형 1) + 공식 심리 지원(유형 2) 상호 보완 모델

저널리즘 교육 — 5·18 역사적 준거 침투 양태를 취재 윤리·세대 기록 연속성 교육에 반영

한계 + 후속 연구

한계 4영역

표본·모형 — N=119, 자유 파라미터 대비 ~5:1 경계·권장 N≥200 후속 wave 필요

외부 공식 시상 vs 일상 인정 분리 측정 부재 — 일상 동료·상사 인정 미측정

인과 방향 — 횡단 자료 모형 동치 가능성·PTG → 지속 의지는 이론 표준 근거 채택, 종단 검증 필요

측정·표본·문화 — 번아웃 정신적 거리만 측정, PTGI 5요인 합산, 질적 N=8 수상자 한정

후속 5축

종단 설계 — 손상·회복 경로 시간 검증

외부 공식 시상 + 일상 인정 분리 측정

프리랜서 안전·심리 지원 국내 실증

역사적 집단 기억 침투 양태 — 다른 사건·직업 공동체 비교

회상 조절 양태 임상심리 평가 결합 + 번아웃 4차원 분리

IV · 결론 — 합의·한계·후속

19 / 20

감사합니다

연사 : 조재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 레메디아 연구단장

2026년 5월 16일(토)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한국영상기자협회 · 서강대학교 레메디아 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한국영상기자협회 · 서강대 레메디아 연구단 · 2026.05.16

20 / 20

A graphic featuring three overlapping, torn-edge banners. The top banner is dark blue with the text 'NEW ERA : 민주주의의 리부트' in white. The middle banner is light blue with 'REBUILDING' in white. The bottom banner is white with 'DEMOCRACY' in blue. Below these, another white banner with 'FOR A NEW ERA' in blue is visible. The banners are arranged diagonally across the page.

178

179

발제2

분쟁 지역 취재
저널리즘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필립 콕스 |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실험적 영화와 보도물(르포르타주)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네이티브 보이스 필름(Native Voice Films)'을 설립하였다. 분쟁 지역 취재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그리어슨 어워드(British Grierson Award), 로리 펙 어워드(Rory Peck Award), 베를린 영화제 평화영화상, 프리 바요 칼바도스(Prix Bayeux Calvados),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분쟁 지역 취재 저널리즘

필립 콕스 |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필립 콕스입니다. 저는 영상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 그리고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다뤄온 트라우마의 문제, 교육과 훈련, 오늘날 영상기자로써 일한다는 것의 의미, 프리랜서와 소속 기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2022년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로서, 수단에서 제작한 「수단의 스파이더맨」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엇을 계속하고 싶은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3년 무렵부터 기자이자 영상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해왔으며, 주로 라틴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중동 지역에서 취재했습니다. 저는 짧은 형식의 보도물도 제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8분에서 10분 정도의 보도영상도 만들었고, 30분 미만의 중편 취재영상 작업도 해왔으며, 현재는 극장 상영용 다큐멘터리와 장편 다큐멘터리 작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프리랜서 기자 공동체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변화하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직장과 현장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웰빙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팀으로서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혼자서는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한 방송사 조직 안에서 편집팀과 어떻게 일할 것인지 등은 모두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힌츠페터국제보도상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수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수단에서 활동해왔고, 당시 다르푸르 지역에서 정부에 맞선 초기 봉기 세력을 취재한 첫 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자비를 들어 프리랜서로 현장에 들어갔고, 반정부 세력과 지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그 지역에 대한 깊은 접근성과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다른 지역들을 오가며 계속 작업을 이어갔고, 2016년에는 수단인 동료 다우드와 함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조사하는 매우 어려운 취재를 위해 다시 수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취재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르푸르 내부에 있는 동안 수단 정부가 우리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를 피해 다닐 수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민병대에 납치되어 한동안 사막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었고, 이후 정부 측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기간 비밀 구금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비밀 구금 과정은, 말하자면 매우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혼란의 시간이 있었고, 이어 신체적 폭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구금될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일이 트라우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기에 제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석방된 뒤 저는 한동안 수단에서 추방된 상태가 되었지만, 이후 혁명과 독재 정권의 붕괴가 일어난 뒤 2021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났고, 그곳에서 「수단의 스파이더맨」을 제작했습니다. 그 작품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을 수상한 매우 뜻깊은 취재영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카르툼 거리에서 싸우던 한 젊은 활동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특히 수단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이끄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또한 내레이션이나 화면 어디에서도 백인 기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게 「수단의 스파이더맨」은 일종의 치유와 해방 같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제가 체포되었던 사건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결국 제 자신에게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단의 스파이더맨」은 온전히 취재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영향력 있고, 깊이가 있으며, 반응과 토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고 반응했으며,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꺼내는 이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 저 저는 구금 기간 동안, 그리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갔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언론계에서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비판부터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가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했다거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무모한 기자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두 알고 난 뒤 뒤늦게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일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저와 제 팀은 훈련과 준비를 통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를 종종 바다를 향해하는 선원에 비유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바다처럼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선원의 역량이란 결국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환경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기자가 무모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했는지, 그리고 폭풍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이야기할 때 총탄과 총기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 위험, 온라인상의 위험, 앞으로 닥칠 새로운 위험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는 없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려 하든, 태평양을 건너려 하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기자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위해 충분히 준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날씨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생각했는가, 배를 통제할 수 있는가, 돛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은 상도 받고 많은 주목도 받았지만, 동시에 특히 가족 안에서조차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현장에서 영상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히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모든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늘날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편집자들과 함께해야 하고, 방송사와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집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기준과 압박,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를 취재할 것인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위험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전환하며, 우회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수단의 스파이더맨」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서 수단에서의 경험, 그리고 「수단의 스파이더맨」 이전에 겪었던 투옥과 체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문을 당하는 일, 심지어 고문을 겪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자로서, 영상기자로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뒤, 그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고, 기자들은 제게 다가와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짧고 자극적인 한마디를 원했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로 주목받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받는 이유는 단지 피해자였기 때문이었고, 혹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은 백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십만 명의 수단인들이 저와 함께, 혹은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자들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자신의 작업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 카메라 앞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인터뷰 방식 속에 어떤 한계와 부족함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인터뷰하는 방식과 이런 문제를 꺼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카메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서 취약함을 느끼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을 인터뷰해왔지만, 어쩌면 언제나 적절한 방식으로 질문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를 다루는 일에 대해 배운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힌츠페터국제보도상과, 제가 그 상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수단의 스파이더맨」으로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팀으로서 매우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CNN을 위한 3~4분짜리 짧은 리포트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분쟁 지역, 또 거리의 혼란”이라는 익숙한 고정관념만 반복하게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훨씬 더 길고, 더 깊이 있으며, 인물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2분에서 23분 정도의 심층 취재영상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프로듀서 둘이서 독립적으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리스크였습니다.

저희 작품의 ‘스파이더맨’은 마블의 붉은 의상을 입고 거리를 질주하며 군경을 향해 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촬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백인 기자가 거의 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띄는 표적이었고, 그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취재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현장 촬영의 규율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촬영하는 법, 서사를 만들어내는 법, 관객을 한 인물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자 절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를 받지 않은 채 프리랜서로 작업할 때는 내 작업이 과연 세상에 공개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언제나 제 취재 대상,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와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제게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의 최전선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우리의 작업이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2년 이전까지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힌츠페터의 역사나 광주, 그리고 1980년대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과 학살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한국에 도착한 뒤 동료들과 다른 수상자들로부터 매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쯤에는 국회의장을 만나 세계 언론의 현실, 기자 안전, 그리고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매우 큰 감동이었습니다. 서울의 국회에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장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운 경력을 쌓아왔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던 정치적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시상식 역시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의 안내로

박물관과 묘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가 기자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힌츠페터가 독재 정권의 실상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해한 미디어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선전과 왜곡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같은 플랫폼 안에서 정치 선전, 미디어 권력 다툼, 이념 전쟁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의 눈에는 모든 언론과 기자가 한데 묶여 보이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며, 때로는 자존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광주에서 열린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기자라는 존재와 그 사회적 의미를 진심으로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기자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시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언론의 역할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의사나 엔지니어, 농부, 시민만큼이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작동하는 사회, 권력이 시민에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에서 받은 그 환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다시 힘을 주었고, 저는 그 경험을 세계 여러 기자들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런 경험을 선물해주신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위원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제 작업과 관련된 정신건강, 웰빙, 그리고 트라우마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동료들 사이의 상호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항상 방송사나 고용주가 상담사나 전문 지원 체계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의 복지와 안전을 살피고, 준비 과정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한 취재가 끝난 뒤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정신건강을 돌보며,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자와 조직 운영자들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더 행복하고, 에너지와 의욕을 가진 기자들이 결국 더 좋은 보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웰빙과 트라우마, 그리고 직장 내 PTSD 문제는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속적인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 또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첫걸음으로서, 우리는 기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 온 기자들이든,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기자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동료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상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통하며 응원해주신 한국영상기자협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위원회와 5·1기념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강인하고, 안전하며, 서로를 돌보는 저널리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1

외상에서 상으로

: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임인재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KBS 뉴스 비평위원과 TV조선 저널리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외상에서 상으로

: 영상 기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의 역할 탐색

임 인 재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1. 연구 전체 의의: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 영상 기자의 정신건강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역사적인 사건들(5·18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건, 12·3 계엄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들의 최전선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영상 기자들의 직무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참사 현장을 기록한 기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이 연구는 직접 그 현장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영상 기자들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 외상 연구(손상 경로)와 직업 소명 연구(회복 경로)를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탐구했다는 점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선도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저널리스트들의 정신건강을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 설문방법과 질적 인터뷰를 병행한 혼합방법론을 통해 영상기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2. 주요 발견 및 의의

외상 노출의 심각성과 회복 자원: 조사 결과, 국내 영상기자의 75.6%가 7건 이상의 외상유발사건을 직접 경험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손상을 상쇄할 자원으로 '직장 내 존중 커뮤니케이션 풍토'와 '외부의 공적 인정(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제시했습니다.

힌츠페터 시상상의 역할 '생성'이 아닌 '강화': 질적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흥미로운 점은 외부 시상이 새로운 소명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된 책임감을 공적으로 확인해주고 더 넓은 맥락에서 재의미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큰 재난 현장을 취재한 영상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큰 직업적 소명의를 이미 지니고 있으며, 힌츠페터 상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긴장과 죄책감: 연구에 따르면 힌츠페터 수상자들은 취재 대상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쁨보다는 미안함과 생존자 죄책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상의 기쁨보다는 이는 시상 기관이 수상자의 사후 심리 관리 체계까지 고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힌츠페터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척도화의 의의

이 연구에서 개발된 '힌츠페터 인지 및 영감' 척도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영화 〈택시운전사〉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듯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인물입니다. 단 한 장의 기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의 정신을 영상기자의 직업 윤리와 연결하여 측정 도구로 정교화한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5·18이라는 역사적 준거가 현재의 젊은 기자들에게도 기성세대와 동일한 무게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역사적 기억이 세대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수되고, 현장의 기자들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병행된다면 본 연구의 논의는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제시된 '외상유발사건 경험' 척도는 향후 저널리즘 현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기자는 직무 수행 중 외상유발사건과 반복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단순히 학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저널리스트들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표준 스케일로 발전하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연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을 후속 연구나 현장 매뉴얼에 상세히 공개한다면, 위험에 노출된 기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결국 영상기자에게 상(賞)이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자신이 겪은 외상(外傷)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힌츠페터의 기록 정신을 잇는 영상기자들이 건강하고 자부심 있게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2

카메라 뒤의 상처

NEW ERA : 민주주의 리부트
REBUILDING
DEMOCRACY
FOR A NEW ERA



신봉승 |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 영상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에서 세 차례 취재하였다. 2025년 한국방송기자대상 올해의 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클럽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에서 미디어학을 수학하였다.

카메라 뒤의 상처

신 봉 승 |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 영상기자

들어가며

오늘 세미나는 분쟁지역 영상기자의 외상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두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Phil Cox의 발표는 수십 년의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1인칭 서사이고, 조재희 교수팀의 발표는 119명의 국내 영상기자를 대상으로 한 혼합연구입니다. 두 발표가 서로를 풍부하게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을 유지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세미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토론자는 두 발표의 접점과 간극을 짚은 뒤, 각 발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두 발표가 만나는 지점 — ‘공적 인정’의 기능

두 발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현상을 가리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수상자의 직업적 자부심과 현장 복귀 의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Cox는 2022년 수상 이후 자신의 몸이 담고 있던 트라우마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를 ‘미디어 공동체 외부의대중’으로부터 확인받은 경험이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조재희 교수팀의 경로분석 역시 힌츠페터 인지→영감→직업적 확신→외상 후 성장(PTG)→현장 업무 지속 의지로 이어지는 4단계 직렬 매개 구조를 통계적으로 입증합니다.

두 발표가 수렴하는 핵심 명제는 ‘공식 시상은 새로운 소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책임감을 공적으로 타당화함으로써 회복 경로를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상의 효과가 외재적 보상이 아닌 정체성 확인 기제임을 시사하며, 저널리즘 시상 연구(Nölleke et al., 2023)의 양가성 논의를 넘어서는 실증적·경험적 발견이라고 평가합니다.

2. 두 발표 사이의 간극 — 맥락의 차이

그러나 두 발표 사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맥락적 차이가 있습니다. Cox는 프리랜서 국제 영상기자로서 조직 내 존중 풍토라는 변수가 구조적으로 부재한 환경에 있습니다. 조재희 교수팀 연구에서 조직 내 존중 풍토는 손상과 회복 양 경로 모두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Cox의 서사는 역설적으로, 조직 지원이 없을 때 외부 공식 시상이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로 읽힙니다. 질적 연구의 P5 참여자가 프리랜서로서 조직 지지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상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과 정확히 겹치는 지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인 대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영상기자 표본(지상파 64%, 종편 27%)은 대부분 조직 소속이며, 평균 근속 13.9년의 정규직 중심 집단입니다. Cox를 포함한 국제 수상자들은 프리랜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의 결과를 국제 영상기자, 특히 프리랜서에게 외삽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3. Phil Cox 발표에 대한 질문

첫째, Cox는 고문과 구금 경험 이후에도 현장 복귀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를 ‘선원의 회복탄력성’이라는 은유로 설명합니다. 이 은유는 저널리스트 개인의 준비와 훈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매체의 안전 투자 부족, 프리랜서 보험 공백—를 자연화할 위험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전제가 구조적 개선 요구를 희석시키는 논리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Cox는 ‘자신이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힘든 경험으로 꼽습니다. 이는 저널리즘 정체성(기록하는 자)의 근본적 역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역할 전환이 트라우마 처리 방식이나 현장 복귀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이후 취재 대상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더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셋째, Cox는 광주 방문과 힌츠페터의 유산이 자신에게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무를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고 밝힙니다. Cox가 경험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한 감각은 영국이나 수단 같은 다른 맥락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이후 취재 방향이나 방법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까?

4. 조재희 교수팀 발표에 대한 질문

첫째, 연구는 힌츠페터 인지와 영감을 회복 경로의 출발 변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츠페터상을 인지하는 영상기자와 그렇지 않은 영상기자 사이에 이미 직업적 관여도나 경력 특성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즉, 상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 경로 진입과 관련된 선행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역인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국내 참여자 4명은 수상 귀인을 집단 외부로 돌리는 반면, 국외 참여자 4명은 개인적 책무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상호의존적 대 독립적 자기라는 문화심리학적 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참여자 중 12·3 계엄 취재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즉 사건이 아직 법적·정치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이 집단 귀인 경향을 강화하는 상황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셋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 언론상 제정 기관의 수상자 사후 심리 지원 체계를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특히 프리랜서 별도 트랙의 경우, 네트워크와 재정 지원 외에 어떤 형태의 개입이 효과적일지 연구 과정에서 시사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나가며

두 발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외상과 회복은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조직·직업 공동체·사회적 인정 구조라는 다층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힌츠페터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특별한 무게를 갖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누는 논의 역시 영상기자들의 기록이 단순한 직업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의 자원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발표자와 참여자들의 더 깊은 논의를 기대합니다.

